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정부신뢰와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21 년 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노 명 종

정부신뢰와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엄 석 진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 년 9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노 명 종

노명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12 월

위 원 장 이 수 영 (인)

부위원장 김 병 조 (인)

위 원 엄 석 진 (인)

국 문 초 록

투표율 상승 현상 및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등을 포함한 온라인 참여 등 정치참여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층별 균등한 정책의제화를 위해 특정 계층·이념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참여의 포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시민의 정서적 경향인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정부 및 정치행위자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정치체제에 대한 정서인 정치신뢰가 투표참여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시민 각자의 정치적 지식 및 자신감을 뜻하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뢰의 대상에 따라 시민의 정치적 신뢰 개념을 정부신뢰·정치신뢰·내적 정치효능감으로, 정치참여를 참여 방식에 따라 투표·비투표참여로 구분하여 그동안의 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의의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8~2019년 데이터를 활용, 전국 19~69세 성인 16,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PSS 25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계수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조작적 정의 관련, 투표참여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참여 여부를 반영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비투표참여는 정치적 대화와 그 외 공적 참여, 항의 참여, 온라인 정치참여를 포함하는 비제도적 정치참여로 구별되었다. 이에 따라 투표참여, 정치적 대화,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분석을 각각 진행하였다. 관련한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이념 성향, 정당일체감, 주관적 계층의식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투표참여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비투표참여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정치적 대화에는 긍정적,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치신뢰는 투표참여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비투표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투표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비투표참여에는 유형에 따라 정치적 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절효과 관련, 내적 효능감은 정치신뢰와 비투표참여의 관계에서만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나머지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참여 유형별로 보면 투표참여에는 시민 자신에 대한 내적 정치효능감만이 정(+)의 관계를 맺은 반면, 비투표참여에는 독립·조절변수가 대체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의 경우, 유권자가 그 대상인 '정부'에 행정부뿐 아니라 현직 집권 여당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어 개별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정부신뢰 형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각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부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다.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제고되어 정치적 동원에 관한 Gamson 가설을 지지하였다. 정치신뢰는 정치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제고시켜 비투표참여를 높인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참여 자체로부터 얻는 효용을 높임으로써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며, 높은 정치신뢰 보유자의 정치참여도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치권의 정책분야별 의견수렴 및 정책의제설정 노력과 함께 정치참여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유권자의 태도·가치에 대한 시민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단, 독립·조절변수가 통계적으로 엄밀한 독립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 적은 문항수에 따른 측정의 신뢰성 문제 등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는 정치참여 및 신뢰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의 보완과 신규 측정문항의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주요어 : 정부신뢰, 정치신뢰, 내적 정치효능감, 정치참여, 투표참여, 위계적 회귀분석

학 번 : 2016-25736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6

1. 연구의 대상 ····· 6

2. 연구의 방법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 8

제 1 절 정치참여 ····· 8

1. 정치참여의 개념 및 의의 ····· 8

2. 정치참여의 범위 ····· 10

제 2 절 정부신뢰 ····· 14

1. 정부신뢰의 개념 및 의의 ····· 14

2. 정부신뢰의 구성요인 ····· 16

제 3 절 정치효능감 ····· 18

1. 정치효능감의 개념 및 분류 ····· 18

2. 외적 정치효능감의 재정의 : 정치신뢰 ····· 20

제 4 절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

1. 사회경제적 요인 ····· 22

2.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 ····· 25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29

제 3 장 연구 설계 ····· 31
제 1 절 연구모형 ····· 31
제 2 절 연구가설 ····· 32
1. 정부신뢰와 정치참여에 대한 가설 ····· 32
2. 정치신뢰와 정치참여에 대한 가설 ····· 34
3.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 35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 37
1. 종속변수 : 정치참여 ····· 37
2. 독립변수 : 정부・정치신뢰 ····· 40
3. 조절변수 : 내적 정치효능감 ····· 42
4. 통제변수 ····· 43
제 4 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 45
1. 분석자료 : 사회통합실태조사 ····· 45
2. 분석 범위 및 방법 ····· 46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 49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 49
제 2 절 신뢰도 분석 및 요인 분석 ····· 55
제 3 절 상관분석 ····· 58
제 4 절 회귀분석 ····· 60
1. 투표참여 ····· 65
2. 비투표참여 Ⅰ : 정치적 대화 ····· 66
3. 비투표참여 Ⅱ : 비제도적 정치참여 ····· 68

제 5 절 분석결과 종합 ····· 72

제 5 장 결 론 ····· 80

제 1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 80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 83

참고문헌 ····· 87

Abstract ····· 93

표 목 차

[표 1-1] 1990년대 이후 한국 주요 선거 투표율 ····· 2
[표 2-1] 정치참여의 유형과 예시 ····· 13
[표 2-2] 대표적인 정치효능감 측정 연구 ····· 19
[표 2-3]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결과 ·· 24
[표 2-4]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 27
[표 3-1] 선행연구의 비투표참여 관련 측정요인 ····· 39
[표 3-2] 변수의 종합적 설명 ····· 44
[표 4-1]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49
[표 4-2] 연구대상자의 정치적 특성 ····· 50
[표 4-3] 연구대상자의 투표참여 ····· 51
[표 4-4] 연구대상자의 비투표참여 ····· 52
[표 4-5] 연구대상자의 정부신뢰 ····· 53
[표 4-6] 연구대상자의 정치신뢰 ····· 54
[표 4-7] 연구대상자의 내적 정치효능감 ····· 54
[표 4-8] 비투표참여 요인 분석 결과 ····· 56
[표 4-9] 정부신뢰·정치신뢰 요인 분석 결과 ····· 56
[표 4-10] 신뢰도 분석 결과 ····· 57
[표 4-11] 상관분석 결과 ····· 59
[표 4-12] 회귀분석 결과 Ⅰ - 선거참여 횟수 ····· 61

[표 4-13] 회귀분석 결과 II -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 ····· 62
[표 4-14] 회귀분석 결과 III - 비제도적 정치참여 여부 ····· 63
[표 4-15] 로지스틱 회귀분석 - 선거별 투표참여 여부 ····· 64
[표 4-16] 연구가설 검증 결과 ····· 71
[표 4-17]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 (2018~2019년) ····· 73

그 림 목 차

[그림 2-1] Easton 정치체계이론에 기초한 정치효능감의 재정의 ·· 21
[그림 3-1] 연구 모형 ····· 32
[그림 4-1] 정치적 대화에 대한 조절효과 그래프 ····· 67
[그림 4-2]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조절효과 그래프 ····· 6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사회적 변화 양상 중 하나는 정치 참여의 확대다. 우선 투표참여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2년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 기존 부재자투표를 대신하여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도,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 등은 정치참여 집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선거 참여 비용을 절감시켰다. 제도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투표율은 2010년대에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고, 21대 총선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24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총선 구도 상 진보/보수 양당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각 지지층이 결집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COVID-19 사태를 지나며 정부의 역량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함에 따른 국가 효능감 증대의 결과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원철 등, 2020)

투표 등 제도적 정치참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팟캐스트, 유튜브 등 미디어의 다변화로 이어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담론을 구성하며 '열성적 지지층'을 형성하였다. 최근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관련

[표 1-1] 1990년대 이후 한국 주요 선거 투표율 (단위 : %)

대통령 선거						
14대 (’92년)	15대 (’97년)	16대 (’02년)	17대 (’07년)	**18대 (’12년)**	**19대 (’17년)**	
81.9	80.7	70.8	63.0	**75.8**	**77.2**	
국회의원 선거						
15대 (’96년)	16대 (’00년)	17대 (’04년)	18대 (’08년)	**19대 (’12년)**	**20대 (’16년)**	**21대 (’20년)**
63.9	57.2	60.6	46.1	**54.2**	**58.0**	**66.2**
지방선거						
제1회 (’94년)	제2회 (’98년)	제3회 (’02년)	제4회 (’06년)	**제5회 (’10년)**	**제6회 (’14년)**	**제7회 (’18년)**
68.4	52.7	48.9	51.6	**54.5**	**56.8**	**60.2**

규탄 집회,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서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여론이 현실정치권에 영향을 줌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대규모 항의적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 및 안착, 시사 유튜브 채널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정보의 공급을 증대시켰고, 시민의 정치 이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한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촛불집회는 일반적인 사회운동(social movement)과는 달리 조직화된 구심점 없이도 시민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정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온라인에서도 개별적 시민 의견의 합(sum)이 일종의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와 선거에 관한 이론은 학력,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 비용을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발히 정치과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회의 정치참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참여의 비용이 높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정치참여가 비교적 수월한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의 의견은 과대대표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며, 최근 나타나는 정치참여 확대 양상은 모든 사회적 계층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정치참여 영역에서 일부 극단적 지지층 위주로 일종의 확증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념편향이 강한 유권자 위주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유권자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하상응・길정아, 2020) 특정 계층・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정치참여의 포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술적 측면에서도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의회, 정당 등 정치행위자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는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정치적 평가 경향은 각 사회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단일한 사회 내의 개개인에게도 개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정부・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 개인의 정치참여 양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 투표 행태의 동기를 현직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와 후보의 미래 수행역량에 대한 평가인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구별되어 개인이 주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 및 정치행위자에 대한 평가, 그 중에서도 정서적 경향을 나타내는 신뢰(trust)의 영

향력을 분석한다. 이 때 국가·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개념에 있어 '정부신뢰'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평가, 즉 정치행위자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인 '정치신뢰'를 구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영역에 대한 의존과 기대는 높은 반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념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

또한, 신뢰감이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Campbell, Gurin & Miller, 1954: 홍혜승·류은영, 2015에서 재인용)을 뜻하는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치신뢰가 정치참여의 행동 또는 중단으로 연결됨에 있어 본인의 정치적 행동이 실제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연관 관계를 증폭시키거나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제기된 정부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 여부와 함께 행정부 및 정부 기관과 구별되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의 존재 여부를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정치참여는 관습적 참여 중 투표참여와 비투표참여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정치참여 형태별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처럼 분류한 것은 조사 데이터의 문항이 투표참여와 비투표참여를 별도로 측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습적/비관습적, 통상적/비통상적 정치참여 등에 비해 시민 입장에서 참여 형태 및 동기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정부·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정서적 경향이 갖는 별도의 경로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내적 효능감과 정부·정치신뢰 간 관계에 대

한 논의를 검증하고, 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특히 개인의 낮은 정부·정치신뢰를 보완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정부·정치신뢰와 투표·비투표 참여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정부·정치신뢰 수준은 내적 효능감의 조절효과에 근거하여 개인의 투표·비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그동안의 정부·정치신뢰와 정치참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가 정부신뢰의 비제도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엇갈린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SNS,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청원 등 다양한 참여 기제가 도입된 현 상황에서의 분석은 시의성을 가진다. 그리고 정치참여에 정부·정치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확보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8·2019년에 실시한 ‘사회통합연구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연구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대한민국 19세~69세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연간 8,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조사가 이루어진 각 횡단면적 시점으로 ‘2018년 9월 ~ 2019년 10월’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개인(individual)’이다. 정치참여의 정도는 공동체 단위별로도 그 특성을 비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참여의 주체는 개인이며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개인의 선택과 정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여 관측치 증가에 따른 분석 적합성 제고의 이점도 존재한다.

2. 연구의 방법

우선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치효용감 등 주요 개념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시행한다. 그리고 해당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진행한 후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설계를 발전시켰다. 이를 통하여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독립·종속·조절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화한다.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정부·정치신뢰가 정치참여 유형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미치는 조절효과는 유의한지와 관련한 연구 가설과 그 모형을 설정한다.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 모형을 구체화한 후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각 단계 모형의 종속변수 설명력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주 효과(main effect) 및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상호작용항의 부호와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의 양태를 파악한다. 이후 통계분석 결과에 나타난 정치참여 양태를 행정학·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이를 기초로 정치참여의 양·질 제고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해당 연구의 한계점과 보완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통하여 정치참여의 영향 요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최근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치참여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생산적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증대되도록 하는 정책기획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정치참여

1. 정치참여의 개념 및 의의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시민이 행하는 정치에 관련된 행위 또는 행동’(이재철, 2019)이라는 정의와 같이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정치적 행동 전반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치참여는 참여방식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정치참여는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기준으로 한 투표/비투표참여, 기존 정부나 의회 등의 제도권 내 정치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와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구분하는 관습적(conventional)/비관습적 참여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대표적 예로 Milbrath & Goel(1977)은 정치참여를 관습적/비관습적 참여로 분류하며, 관습적 참여의 예로 투표참여와 선거캠페인 등을, 비관습적 참여의 예로 진정서 서명, 집회 및 시위, 기부 행위 등을 들었다.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이다. 시민은 정치참여를 통하여 정치엘리트와 정부를 상대로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선호를 표명하고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Verba & Nie, 1972) 즉, 시민의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인 정치적 대표성과 반응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치참여의 의의와 관하여 샤츠슈나이더(E.E.Schattsschneider)가 「절

반의 인민주권(The Semi-sovereign People)」(1960/2008)에서 다룬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도자와 조직들이 공공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서 일반 대중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로 정의하여 정치참여의 확대가 정치 활동의 경쟁성 제고와 공정한 분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증했다. 특히, 정치참여의 확대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이 특정 계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하는 '갈등의 사사화'(the privatization of conflict)를 방지하는데 유익이 있다. 그는 다수 대중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슈가 제도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 즉 정치 영역으로의 '갈등의 사회화'(the socialization of conflict)와 정치참여의 확대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았다. 즉, 정치참여는 다수 대중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츠슈나이더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공동체를 확대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정치적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치참여는 행정성과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의 자기이익추구적 행태를 견제·감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정치참여는 정책문제의 식별과 대안모색 과정에 있어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박경효, 2013)

특히 정치참여는 시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선호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함은 물론, 최근에는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공론화시키는 선도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

게 되는 영역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여성, 인권,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옮겨지고 있고, 정치참여 문화 역시 과거 엘리트 주도형으로부터 온·오프라인에서의 자발적 동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홍혜승·류은영, 2015)

2. 정치참여의 범위

정치참여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어느 범주까지를 일반적인 사회활동과 구분되는 '정치와 관련된 활동'인 정치참여로 인정할 지이다. 우선 합법적·제도적 행위만을 정치참여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정치참여 연구의 선구자격인 Verba & Nie(1972)는 정치참여를 '정책결정자의 충원(선거) 및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으로 정의하며 투표(voting), 선거운동(campaign activity), 공동활동(cooperative activity), 접촉활동(contacting) 등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합법적 참여를 정치참여로 분류하였다. Verba et al,(1978; 박찬욱, 2005에서 재인용) 역시 '정부 공직자의 선출과 공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투표, 선거운동, 정당 가입 및 활동 등 일반적으로 국가·법이 보호하는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이어야 정치참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상적으로 정치쟁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 행위 등은 준(Quasi) 정치참여일 뿐, 통상적인 정치참여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는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참여행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비제도적·비의도적 활동까지도 정치참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Huntington & Nelson(1976)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시민의 행동’으로 정치참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정치참여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며, 조직되거나 자연발생적이며,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이며, 평화적 또는 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있고 비합법적인 것이 있으며, 효과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하여 (Huntington & Nelson 1976; 박찬욱 2005에서 재인용) 정치참여의 형태나 효과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Milbrath & Goel(1977)은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시민의 행동’으로, Kaase & Marsh(1979)는 ‘정치 체제의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참여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이 경우 서명운동, 청원, 언론이나 정치인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 공과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시위, 불공정한 법규 준수의 거부 등 폭력적인 행위까지도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 2017년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은 대표적인 정치참여 행위에 포함되며, 개인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정치적 대화 역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청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치참여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비제도적 범주 외에 정치참여의 동기를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Booth & Seligson(1979)는 ‘공공재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로 정치참여를 정의하여 그 동기가 시민이 정부정책 및 정치권의 행태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전환하는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 외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활동까지 참여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파업, 지역 공동체의 협동 활동도 공공재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하였고, 애국심, 정치적 소외감 등 의식적 부분과 관련된 비활동(inaction)까지도 일종의 참여로 보았다. Rosenstone & Hansen(2003) 역시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정치참여를 '사회적 재화나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권자의 행동' 으로 정의하였다.(이재철, 2019에서 재인용) 이 경우 정치참여는 제도나 행위 양태로 규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가치를 사회적 의사결정·담론에 투사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SNS에 세월호 리본나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문구를 게시하는 표현적 행위, 일본 수출 규제에 항의하는 불매운동, 환경·공평의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소비, 공정무역 소비 등 정치적 목적·효과를 지닌 경제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참여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참여의 범위를 비제도적·비관습적 참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한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나뉜다. 박찬욱(2005)은 '시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 로, 류태건(2011)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반시민들의 활동' 으로, 정한울·이곤수(2013)는 '시민이 자신의 선호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관료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자발적 행위' 로 규정하여 행태적으로는 비제도적 참여를 포함하되, 그 목적과 대상은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반면, 어수영·곽진영(2002)은 '시민 각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의견을 경청하는 모든 행동' 으로, 홍혜승·류은영(2015)은 '공공의 관심, 수요, 가치들을 정부와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전반’으로 정치참여를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공적 의사결정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소재로 한 행위 전반을 정치참여에 포함시켰다. 김한나(2016)는 van Deth(2014)의 정치참여 분류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용하여, ‘아마추어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 중 정치적 동기를 가진 행동’으로 정치참여를 폭넓게 정의하였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제도 정치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아니고, 정부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삼는 행동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지만, 시민으로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 분명한 행동’으로서 표현적 참여를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정치참여의 유형과 예시 (김한나, 2016)

조작적 개념		예시
최소정의	**제도적 참여**	투표, 예산회의 참가, 정당 가입, 정치인 접촉
대상에 따른 정의	**저항적 참여**	진정서 서명, 시위, 가두점거, 슬로건 페인팅, 플래쉬몹
동기에 따른 정의	**표현적 참여**	소비자 운동, 불매운동, 인터넷 토론,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사진 바꾸기(예. 세월호 리본 등), 홈페이지에 배너/리본 달기 등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정치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일상생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사회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참여는 이상의 논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2 절 정부신뢰

1. 정부신뢰의 개념 및 의의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나, 정부신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거나, 낼 것으로 기대하는 평가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Easton(1965)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적 정향'으로, Miller(1974)는 '정부의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규범적 기대에 다라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Hetherington(1998) 역시 '정부신뢰를 일종의 회고적 평가로서 정부성과와 연계하여 정부가 만들어내는 각종 산출물의 대한 평가'로 정의하여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해인·홍준형(2013) 또한 '시민의 규범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평가'로 기대 대비 성과의 측면에서 정부신뢰를 정의하였다. 정부신뢰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 박푸름(2015)은 이를 종합하여 정부신뢰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을 '정부의 활동'과 '국민의 기대'로 분석한 바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성과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선순환의 관계에 있다. 정부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정책 혹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통치능력을 강화시킨다. (배귀희·임승후, 2009) 또한 정부기관과 시민 간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핵심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 전체로부터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부와 이념적으로 다른 세력까지 포괄하는 초당파적 합의를 촉진하여 사회 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 금현섭・백승주(2010)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정책지지에 있어 이념적 희생, 즉 정부・여당과 이념성향이 다른 정책을 펼 때 지지계층이 이를 순응하는 정도를 높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정책 추진 및 정책집행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김민혜・이승종(2016)은 선거참여 외의 정치참여인 시민관여(civil engagement)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신뢰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짐을 도출하여, 정부신뢰는 정부성과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정부신뢰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정부신뢰는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해당 사회 내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위축시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를 분석함에 있어 신뢰의 대상인 '정부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는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그 대상을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로 한정할지, 대통령・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으로 할 것인지, 입법부・사법부 등 광의의 정부기관까지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국내 연구들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김기동・이정희, 2017) 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정당성이나 정책결정 과정이 중앙정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1.4%로 상당부분의 예산 및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 집행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신뢰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정부신뢰의 구성요인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병규・이곤수(2013)는 국정운영과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무능력과 비효율성을 보인다면 국민은 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함께 정부와 현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의 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경제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서 유의 여부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가까워진다고 하여 그 영향력이 강화되지도 않았다. (박현주・이명진, 2018)

다른 관점에서, 정부신뢰는 정부의 객관적 성과보다 시민 개개인의 기준에 따른 주관적・규범적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Citrin(1974 : 이혜인・홍준형, 2013에서 재인용)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리더십 및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길정아(2019) 및 하승응・길정아(2020)의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의 대상이 되는 정부는 행정부라는 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이다. 유권자들이 갖는 정부신뢰의 실질적 대상은 현직 정부 여당이므로, 이는 당파적 방향성을 지닌다. 길정아는 2014・2018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당파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경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파가 집권하는지 여부가 정부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신뢰는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공변하며, 당파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정부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성, 즉 회고적 투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전술한 연구자들의 견해와 달리 현실의 유권자는 정부신뢰를 형성함에 있어 정부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특성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강우진(2015)은 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론적으로는 전자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정부의 공정성, 즉 정책집행에 있어 원래의 목적대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했는지 여부가 정부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우진·하솔잎(2016)도 사회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인식할수록,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신상준·이숙종(2016)은 공정성 중 정부기관과 시민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시민이 정당한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한 개념인 상호작용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채용, 조국 前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고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공정성은 앞으로 정부신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제 3 절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

1. 정치효능감의 개념 및 분류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느끼는 역능감(empowerment), 즉 스스로가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박원호, 2017), 또는 유권자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Miller and Miler, 1976 : 정한울・이곤수, 2013에서 재인용) 등으로 정의된다. 정치효능감 개념은 1950년대 Campbell 등에 의해 정치행태 연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는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효능감을 정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책무 관점에서 박찬욱(2005)은 '자신의 시민적 의무가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지하는 것'으로 정치효능감을 정의한 바 있다.

정치효능감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내적 정치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정치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구분된다. Lane(1959 : 류태건, 2010에서 재인용)은 이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자아에 대한 관념과 민주적 정부에 대한 관념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 두 관념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정치효능감은 적어도 두 가지 별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양자를 구분하였다. 이강형(2013)에 따르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인 반면,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부당국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된다. 박영득(2016)은 내적 정치효능감을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적 정향, 외적 정치효능감을 '정부당국'

에 대한 평가적 정향으로 규정하였다. 박원호(2017)는 내적 정치효능감을 '유권자 자신이 얼마나 정치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으로, 외적 정치효능감을 '정치체제가 시민적 투입(input) 과정에 얼마나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Easton(1965)의 정치체제이론에 비추어 재구성하면,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투입, 즉 정치적 행동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내적 효능감과 그것이 정치체제를 거쳐 본인이 생각하는 산출(output)로 이어지는 반응성에 대한 믿음인 외적 효능감이라는 두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구성요소에 대한 측정방식도 달라지는데, 강수영(2013)은 내적·외적 효능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표 2-2]와 같이 수행한 바 있다.

[표 2-2] 대표적인 정치효능감 측정 연구(강수영, 2013)

접근	문항 예시
CPS 원칙도	- (내적)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할 말이 없다 - (외적) 나는 공무원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신경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raig & Maggiotto (1982)	- (내적) 정치와 정부는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때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 (외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은 사람들과 신속하게 접촉한다
Craig, Niemi & Silver (1990)	- (내적) 나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Niemi, Craig, Mattei (1991)	- (내적)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 (외적)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할 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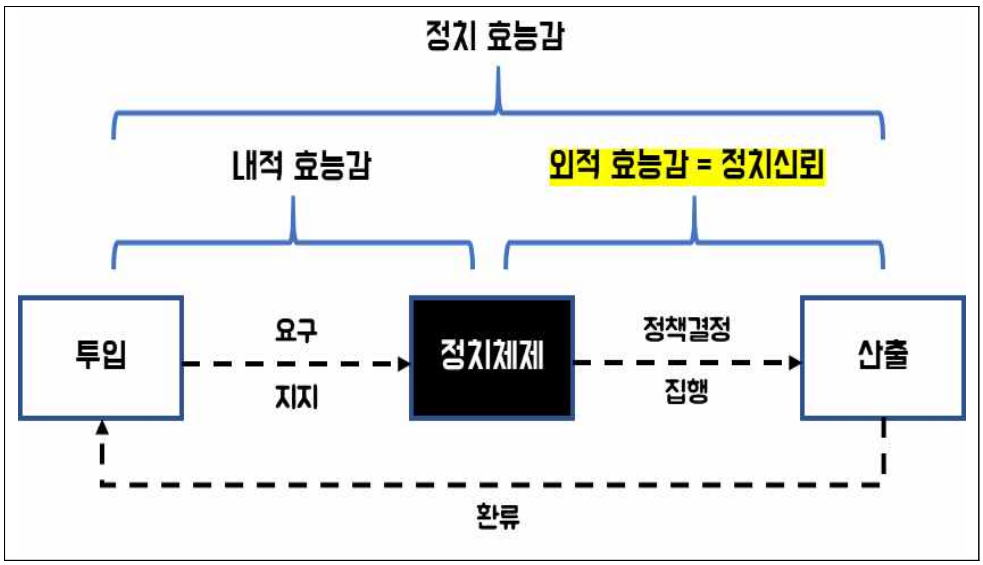
2. 외적 정치효능감의 재정의 : 정치신뢰

앞서 살펴보았듯 정치효능감은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 두 개의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정치효능감이 개인이 정치과정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정서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통한다. 하지만, 양 개념의 믿음의 대상 및 형성 과정이 다르고 선행연구 결과 두 개념이 서로 정(+)의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적/외적 효능감의 해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정치효능감의 정의를 종합하면 '자기 자신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산출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Easton(1965)의 정치체계이론 상에서 '투입→산출'로 이어지는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과정은 '투입→정치체제'와 '정치체제→산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곧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다. 즉, 정치효능감은 위의 두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을 때에만 높은 값을 기록할 수 있다.

개인의 정치효능감 형성 과정은 '정치효능감=내적 효능감×외적 효능감'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려면 정치적 자원의 풍부함, 정치적 요구의 시의적절함, 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도 등 투입 측면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정치체제가 수용하여 정책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출 측면에 대한 믿음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Easton의 정치체계이론에 기초한 정치효능감의 재정의



내적/외적 효능감에 대한 위와 같은 구분은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정치효능감을 변수로 구성할 때에는 내적/외적 효능감을 구별하여 조작적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변수와 정치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양자를 분리하여야만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적 효능감이 정부, 의회 등 정치체제 전반이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믿음, 즉 정치신뢰(Political Trust)와 실상 동일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실제 정한울·이곤수(2013)는 정치참여 연구들이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외재적 효능감을 정치신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뤄지는 외적 효능감의 평가 대상이 '정치체제의 반응성'이며, 대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신뢰 및 믿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정치신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치효능감을

단일한 변수로 분석하는 대신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의 별개 변수로 구분하고, 정치신뢰를 외적 효능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하여 측정한다. 정치신뢰는 정부신뢰와 구분되는 독립변수 측면에서 분석하고, 내적 효능감은 조절변수 측면에서 분석하여 양자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대응성에 대한 평가'가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던 정부신뢰의 개념을 전자로 명확히 한정하는데 기여한다.

제 4 절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경제적 요인

지금까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했다면, 이제 종속변수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한다.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 : Social Economic Status)가 높은 사람이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정치참여는 시간, 돈, 지식 등 개인의 자원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자원(resources)을 많이 보유할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정보처리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다고 본다.(박재영, 2016) Verba & Nie(1972) 등 서구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통상적 정치참여가 활발함을 보였다.

또한, 허석재(2015)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에서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제도적-비제도적 참여의 동조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도출했다. 즉, 불평등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제도적 참여에서는 이탈하고, 그 대신 비제도적 참여에 열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참여의 양태에 따라 디커플링(decoupling)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관되게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아래 [표 2-3]은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연구에 따라 투표참여/비투표참여 여부에 따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는 높아지는 반면, 비투표참여는 인터넷 참여를 중심으로 낮아진다. 성별·교육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르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소득수준으로, 비투표참여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투표참여의 경우 조진만(2017)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한 정치참여'의 문제가 비교적 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김기동·이재묵·이지영(2019)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 선거일 공휴일 지정, 사전투표제 등 정치참여에 용이한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Lijphart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민주주의가 풀지 못한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라고 표현했듯 사회경제적 자원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보통·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정치참여의 평등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표 2-3]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사회경제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박찬욱 (2004)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O (투표참여 + 비투표참여 -)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곽현근 (2007)	O	O (+)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X
류태건 (2011)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O (+)	O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이강형 (2013)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X	X	X
이혜인, 홍준형 (2013)	O	투표참여 O 비투표참여 X	O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정한울, 이건수 (2013)	O	O	O	투표참여 X 비투표참여 O
김한나 (2016)	X	O (투표참여 + 인터넷토론 -)	투표참여 O 비투표참여 X	X
조진만 (2017)	X	O (투표참여 + 비투표참여 -)	투표참여 O 비투표참여 X	투표참여 O 비투표참여 X
이승원, 임한샘, 이현우 (2018)	비투표참여 (국민청원) X	비투표참여 (국민청원) -	비투표참여 (국민청원) O	비투표참여 (국민청원) X

2. 정치효능감 및 정부신뢰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는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내적 효능감의 경우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신념이 높다는 것은 참여 행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높인다.(홍혜승・류은영, 2015) 류태건(2011)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양자 모두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appella and Jamieson(1997 ; 유성진, 2017에서 재인용)은 낮은 정치적 신뢰는 정치참여에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김기동・이정희(2017)는 정치효능감이 시위 참여 외에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원・임한샘・이현우(2018)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연구에서 내적 효능감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외적 효능감, 즉 정치신뢰는 국민청원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연구에 따라 정치효능감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류태건(2010)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반된다는 점을 기술하며, 해당 현상은 다차원적이므로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신뢰의 경우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규범적・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에 관한 개념이므로, 정부신뢰는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수요를 제기하고, 지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일

반적인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신뢰가 통상적 정치참여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며, 특히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정부신뢰가 낮을 때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더 높아진다는 분석도 존재한다.(이혜인・홍준형, 2013) 길정아(2019)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김대욱・이승종, 2008), 정부신뢰의 대상이 현직 정부 여당(party government)이므로 유권자의 당파적 방향성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길정아, 2019) 등이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정부신뢰 각각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닌 양자 간 관계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Gamson(1968)은 “높은 (내적)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가 정치적 동원에 최적화된 조합이며, 그럴 때 사람들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이른바 Gamson 가설을 주장한 바 있다. Seligson(1980)은 이를 ‘냉소적인 참여자’라고 표현하며, 고신뢰・고효능감 유형이 제도화되고 합법적인 정치참여에만 관여하는 반면 이들은 시위 등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분석하였다.(김한나,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은 정부신뢰가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박원호(2014)는 정부신뢰 대신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와 같은 개념을 지니는 외적 효능감과 내적 효능감의 관계를 통해 정치참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는 내적 효능감은 높지만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 시민들의 역량과 에너지는 높은 반면 정치체제의 수용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투표, 정당, 시민단체 등을 경유하는 통상적인 참여 대신 개인의 단발성 항의 및 촛불집회 등 거리의 정치에 동원될 유인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박원호는 고정치신뢰・고효능감의 조합이 높은 수준의

[표 2-4]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박원호, 2014)

내적 정치효능감 \ 외적 정치효능감(정치신뢰)	저	고
고	**참여의 위기 정치적 소외**	참여의 선순환
저	참여의 부재	신민적 참여

정치참여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역량도 함께 제고시키는 선순환적인 모습을 띈다고 보아 정치신뢰 제고를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평가하였다.

정한울・이곤수(2013)는 위의 논의를 기반으로 시민의 내적 효능감과 정치신뢰의 관계가 주된 정치참여 유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높은 내적 효능감과 높은 정치신뢰 유형이 투표참여를, 높은 내적 효능감과 낮은 정치신뢰 유형이 비투표참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나(2016) 역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따라 주된 정치참여 유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적 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저항적 참여에 적극적임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행위의 경우 내적 효능감, 정부신뢰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인터넷 토론 등 표현적 참여의 경우 내적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뿐 정부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상기 논의를 조합하면 내적 정치효능감과 정부・정치신뢰의 조합은 특히 비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그리고 참여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력의 유의성 및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정치참여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투표 등의 관습적 참여와 집회 및 시위, 진정서, 기부행위와 같은 비관습적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참여 유형 양자 간 관계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불만이론(Disaffection Theory)은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와 대체 관계로, 기존 대의민주주의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불만족,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기존 관습적 정치참여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자원이론(Political Resource Theory)는 양자를 보완관계로 본다. 이 관점은 정치적 자원·네트워크를 보유한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이 비관습적 정치참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이론과는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보다 정치참여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교육수준의 향상, 매체의 발달로 인한 시민의 정치적 의식 향상으로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위의 두 이론은 모순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효능감 등이 어떻게 정치참여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효능감은 높지만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증대 현상인 Gamson 가설에 대하여, 불만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의 정부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이 소득이 낮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낮은 소득에 의해 정치과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덜 대표됨에 따라 '편향된 정부의 반응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영득, 2016) 정부신뢰가 하락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관습적 정치참여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자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치참여 제도 보강, 정치적 공론장 창출 등 정부의 역할로 연결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이념성향, 주관적 계층의식, 세대(cohort), 해당 지역 거주기간, 정당일체감, 사회자본 및 대인신뢰, 결사체 참여도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 통제변수로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 경우 몇몇 연구에서 광역지자체(경상・전라・충청・강원・수도권) 단위로 통제변수로 검토되고 있다. 낮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수도권 外 지역에서 비투표참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나, 지역별 유의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있지 않다. (김기동・이재묵・이지영, 2019, 조진만, 2017) 지역주의의 완화, 온라인 기반 정치참여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신뢰와 정치효능감 변수에 대해 그 개념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정치효능감의 경우 내적・외적 효능감이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평가 대상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행동 수행 능력'과 '자신의 의사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성'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변수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해주어야 함에도, 하지만 양자를 분류하지 않고 '정치효능감'이라는 단일변수로 반영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분석 대상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 중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선행연구 검토에 근거하여 보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부신뢰를 포괄적으로 질문할 경우 시민이 인식함에 있어 정부·여당의 이념적·정치적 특성과 개인의 판단기준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분석시점의 정부·여당의 성향, 지지율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변수에 담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이념적·정치적 특성에 따라 시민의 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당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조사시점, 당시 정치지형 및 현 정부의 이념성향 등을 고려하여 결과해석의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뢰의 대상인 '정부'의 범위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집행의 주체는 '행정부'이지만 해당 정권의 정무직 공무원와 여당 또한 정책과정과 성과도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정부신뢰를 관료집단에 대한 신뢰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단,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인 '정치신뢰' 개념은 정부신뢰와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념적·정치적 특성이 정부신뢰 개념에 혼선을 주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정치참여와 신뢰 중 어떤 것이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인지는 연구에 따라 그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론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양자는 정치적 행태 및 심리적 변수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다만, 엄밀한 상관관계 도출을 위해선 어떠한 경로로 상승/하락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동태적 분석이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간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연령대 정치참여의 방법에 따라 양자가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인의 신념체계가 정치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신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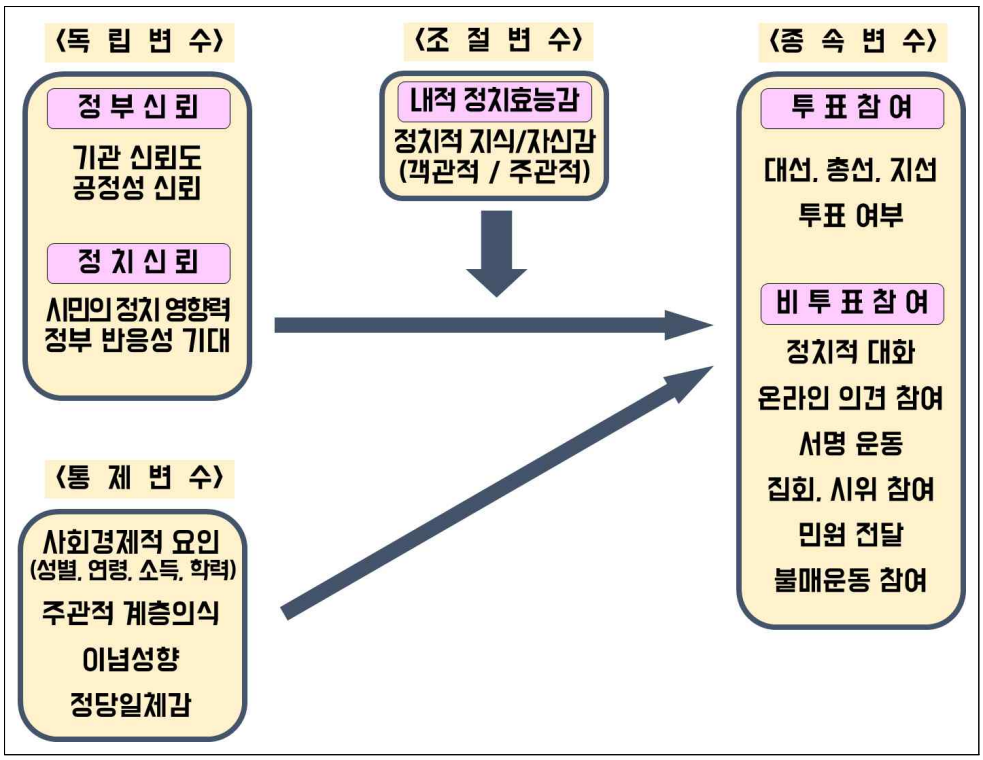
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정부신뢰와 정치신뢰가 개개인의 투표참여와 비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정부신뢰(정부기관 신뢰도, 공정성 신뢰도)와 정치신뢰(외적 효능감)를 핵심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이들이 종속변수인 정치참여(투표참여,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차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때 선행연구에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로 제기되었던 사회경제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 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개인의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등과 같은 변수는 통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 및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하여 내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더하여 1차적으로 투입되었던 변수들의 정치참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1. 정부신뢰와 정치참여의 대한 가설

낮은 정부신뢰는 시민의 정부로부터의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반면, 높은 정부신뢰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 참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갈 유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민의 기대에 대한 정부의 성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것이 회고적 투표로 이어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길정아(2019)의 논의처럼

정부신뢰를 형성함에 있어 정부·여당의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투표 참여 여부가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고착화되어 이러한 영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파성을 지닌 시민이라도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를 기준으로 투표장에 나설 유인이 생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비투표참여의 경우,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반응성 및 정책수요 발굴 능력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므로 투표행위 외 별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높은 참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투표참여에 대한 유인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불만이론의 관점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비투표참여는 시민이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적 표현인 경우가 많다. (이혜인, 홍준형, 2013) 그러므로 정부의 행태 및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관습적인 투표참여 대신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참여 및 별도의 동원(mobilization) 기제를 모색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투표참여의 경우 투표참여와는 다르게 정부신뢰와 역의 상관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측된다. 후술하겠으나 본 연구는 비투표참여를 참여 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되, 그 평균값을 구하여 조작적 정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투표참여 전반과 신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가설 1-1. 개인의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개인의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비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치신뢰와 정치참여에 대한 가설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의 투표 참여 행위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투표참여를 통해 느끼는 효용이 높아질 것이다. 정치신뢰가 정치적 만족·역능감에 대한 지표임을 점을 감안하면, 높은 신뢰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참여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박원호, 2014) 반면, 정치신뢰가 낮을 경우 자신의 투표참여가 지니는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정치적 정보 습득이 저하되는 정치적 소외가 발생하여 제도 정치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투표참여의 경우, 정부신뢰와는 달리 정치신뢰는 투표참여와 동일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투표참여의 경우, Dalton(1996 : 정한울·이곤수, 2013에서 재인용)이 1990~1991년 세계가치관조사(WV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에서 정치적 만족 변수가 항의행위에 대한 참여에 대해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정부신뢰가 정부 및 기관의 '행태 및 성과'에 대한 불신인 반면, 낮은 정치신뢰는 '정치체제', 즉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무용론에 해당한다. 즉, 낮은 정치신뢰는 일부 관습적 정치참여를 우회하는 시도로 이어져 항의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자신의 참여 행위가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소외를 가속화시켜 모든 형태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이다. 반면, 높은 정치신뢰는 정치권의 정책적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굳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 효과도 일부 있지만, 참여 행위가 의제설정·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비선거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즉, 정치신뢰의 경우 정치참여의 형태와 무관하게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가설 2-1. 개인의 정치신뢰(외적 효능감)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개인의 정치신뢰(외적 효능감)가 높을수록 투표 외의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류태건(2011)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모든 연구에서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비투표참여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 즉 정치적 자산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식이라는 점에서 중산층은 물론 특히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에게도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참여의 기대효용을 높인다. 즉, 내적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참여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줌과 함께 정부・정치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도 유의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독립변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완화조절효과(negative moderating effect)를 가질 것이다. 이는 신뢰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기존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시민이라도 내적 효능감이 높다면 참여의 내적 유인이 높아짐으로써 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자산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경우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더

라도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정부·정치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내적 효능감까지 낮은 경우 '신민형' 정치문화에 잠식되어 투표 의사가 더욱 크게 낮아질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영향력을 낮게 판단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낮은 기대와 결합하여 투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정부신뢰의 부정적 영향관계가 예측되는 비투표참여의 경우에도, 정부신뢰가 높아 대안적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더라도 내적 효능감이 높다면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참여를 포기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다. 즉, 독립변수에 따라 정치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내적 효능감은 이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관계가 약화된다.

이상의 조절효과 관련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3. 개인의 내적 효능감은 다른 변수들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완화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1.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3-2.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3-3.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3-4.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조작화

1. 종속변수 : 정치참여

1) 투표참여

선행연구의 견해를 종합할 때, 정치참여는 ‘시민의 정치 과정 및 사회적 가치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및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투표참여와 그 외 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한 비투표참여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투표참여를 ‘전국단위 선거 내 투표 참여 여부’로 정의한다. 투표참여, 즉 선거에서의 투표는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방식이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다른 정치참여 방식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며, 다른 참여와 구별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점 기준 직전 3차례의 전국단위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여부(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 #23~25.)를 반영하였다. 실제 분석 시에는 다중회귀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다년간의 정치참여 행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별 3회의 투표에 대한 참여 여부를 합산한 ‘선거 참여 횟수’를 종속변수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선거 참여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선거 참여 횟수에 대한 분석을 검증 및 보완하는데 활용한다.

2) 비투표참여

투표 여부를 제외한 일련의 정치참여 방식을 ‘비투표참여’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비투표참여 유형과 아래의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비투표참여 관련 측정요인을 참조하여 조작적 정의를 시행하였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표시 등 일상화되고 있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유형에 포함하였다. 한편, Verba & Nie(1972)는 정치참여를 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및 사적접촉의 4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류태건, 2011에서 재인용)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및 투표 권유 등 선거활동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및 활동 비율이 높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단순 당비납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참여도가 높지 않은 점, 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①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사적 접촉·정치적 대화), ②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③ 민원·의견 전달하기, ④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하기(공적 참여), 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참여, ⑥ 집회·시위 참여, ⑦ 불매운동 참여(항의 참여), ⑧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온라인 정치참여) 등 8개 요인을 비투표참여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설문 #22-1~22-8.) 각 요인은 4점 범주형 척도(지난 1년간 한 적이 있다/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활동한 적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시에는 요인분석을 통해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된 정치참여 방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평균값을 종속변수 지표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다.

[표 3-1] 선행연구의 비투표참여 관련 측정요인

연구자	비투표참여 관련 요인
박찬욱 (2004)	서명,·불매운동, 집회·시위, 공직자·미디어 접촉, 기부활동
곽현근 (2007)	공직자 접촉, 언론 제보, 시민단체 접촉, 청원서 서명, 시위, 지역사회 공론과정 참여(주민모임·회의, 정치적 대화)
류태건 (2011)	과격 항의활동, 공공활동(공청회 참석, 공적 방문), 온건 항의활동(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집회·시위, 파업), 온라인 정치참여, 선거운동, 사적 접촉
이혜인, 홍준형 (2013)	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시위·집회, 정치인·공무원 접촉, 기부·모금, 언론기관 접촉, 인터넷 투표참여
정한울, 이건수 (2013)	정치인·공무원·정당 SNS 의견 제출, 온/오프라인 청원, 온라인 서명·항의·의사표시, 투표 권유, 공무원·정치인 접촉, 정당활동, 집회·시위, 물리적 실력행사
김한나 (2016) 이승원, 임한샘, 이현우 (2018)	시위, 인터넷 토론 참여
조진만 (2017) 이재철 (2019)	2016~17년 촛불집회 참여

2. 독립변수 : 정부・정치신뢰

1)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정부가 공정한 정책집행 및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라 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신뢰 측정에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정부의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행정부와 정부기관에 국한하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하는 경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또한, 연구에 따라 정부신뢰의 구체적 대상도 정치공동체, 정권. 공직자 등으로 각각 다르다. (문영세, 2019) 행정・입법・사법부마다 영역 구분이 뚜렷하고 그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평가 기준이 상이한 점,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행정부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점 및 정치신뢰 개념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정부신뢰의 범위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검・경찰 등은 정부신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적 경험에 따른 편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선 공무원 개개인이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료 개인은 신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만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행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거나, 낼 것으로 기대하는 평가의 정도'로 한정하여 측정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대상으로 한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질문의 측정값을 정부신뢰로 반영하며, 이를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설문 #35-1, 35-6) 한편, 최근 공정성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강우진(2015)) '행정기관은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에 관한 설문을 추가한다. (설문 #39-1) 그 후 위의 3가지 측정값의 개인별 평균을 정부신뢰로 반영한다.

2) 정치신뢰

정치신뢰는 '정부, 의회 등 정치체제 전반이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외적 정치효능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 가능하다. 일부 선행연구는 정치신뢰를 외적 효능감과 구별하여 측정하고자 하나, 이 경우 오류가 나타난다. 정치신뢰 측정문항으로 '공공기관은 지역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류태건, 2011)와 같이 정부신뢰 관련 문항을 적용하거나, '정치는 일반 국민들과 무관하게 소수 정치인에 의해 좌우된다'(정희옥, 윤종빈, 김진주. 2014))는 문항으로 정치신뢰를 측정하는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문항으로 통제변수로서의 정치효능감을 별도로 측정하는 등이 그 예시이다. 이는 정치적 신뢰에 관한 개념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은 잘못된 조작적 정의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신뢰를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정치체제가 수용하여 정치적 담론 및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외적 정치효능감 측정 시 사용된 바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설문 #21-3, 21-4)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단,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문항은 질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동의한다'를 5점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다른 변수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반대로 적용하여 '정치신뢰가 낮다'를 1점, '정치신뢰가 높다'를 5점으로 변환한다. 그 후 두 측정값의 개인별 평균값을 정치신뢰에 대한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3. 조절변수 : 내적 정치효능감

조절변수란 다른 두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남궁근, 2017) 본 연구는 Easton의 정치체제이론에 기초하여 내적 정치효능감을 '시민 자신의 정치참여로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으로 정의한다. 선행연구는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박찬욱, 2005)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정한울·이건수, 2013) 등 자신의 정치적 자신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류태건, 2010), '나는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강수영, 2013) 등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구성요소로 두고 있다. 강수영(2013)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 측면의 정치적 자신감과 별도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정치적 목표 설정 측면의 정치적 과제난이도 선호를 정치적 효능감의 구성요소로 꼽은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제공하는 정치적 자신감에 대한 두 가지 질문문항인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설문 #23-3) 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설문 #23-4)의 5점 Likert 척도 측정값을 활용한다.. 이 중 후자는 부정적 질문의 형태이므로 해석의 용이함과 일관성을 위해 측정값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를 5점, '매우 동의한다'를 1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4. 통제변수

1) 사회경제적 요인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별(남 / 여), 연령(19~29세, 30 / 40 / 50 / 60대), 학력(초・중학교 / 고등학교 / 4년제 미만 대학 / 4년제 대학 / 석・박사 재학・졸업), 월평균 가구 소득(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 900~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등의 요인을 각 집단별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2)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계층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자신이 계층구조 속 어디에 자리매김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오혁제, 2008) 류태건(2010)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소득과 별개로 정치효능감, 정치신뢰, 정치참여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통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가 제공하는 '귀하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대해 11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답변한 값을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3) 이념성향 및 정당일체감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은 정치행태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요인이다. 특히 현재 집권세력의 이념에 따라 자신과 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정치참여 및 정부신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 이념성향은 매우 보수적 ~ 매우 진보적의 5단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정당일체감의 경우 조사 특성상 정당별 일체감은 측정되지 않았으나,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한 값을 반영하여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보유 여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상의 각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의 종합적 설명

종 속 변 수	
선 거 참 여	* (2016 총선 / 2017 대선 / 2018 지선) 1 = 참여하지 않았다, 2 = 참여했다
비 선 거 참 여	* (8개 요인 - 본문 38p 참조) 1 =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2 = 활동한 적은 전혀 없지만, 향후 해볼 의향이 있다. 3 = 지난 1년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4 =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독 립 변 수	
정 부 신 뢰 (3개 문항)	* (중앙부처 기관 신뢰 정도 / 지방자치단체 기관 신뢰 정도) 1 = 전혀 믿지 않는다, 2 = 별로 믿지 않는다 3 = 약간 믿는다, 4 = 매우 믿는다 * (행정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
정 치 신 뢰 (2개 문항)	*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1 = 매우 동의한다 ... 5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 절 변 수	
내적 정치효능감 (2개 문항)	*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 매우 동의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1 = 매우 동의한다 ... 5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통 제 변 수	
연 령	1 = 19~29세, 2 = 30대, 3 = 40대, 4 = 50대, 5 = 60대
성 별	1 = 남자, 2 = 여자
학 력	1 = 초·중학교, 2 = 고등학교, 3 = 4년제 미만 대학 4 = 4년제 대학, 5 = 석·박사 재학·졸업
소 득	1 =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2 = 100~200만원, ... 10 = 900~1000만원, 10 = 1000만원 이상
주관적 계층의식	* (귀하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 = 보통 ... 11 = 매우 안정적이다.
이 념 성 향	1 = 매우 보수적, 2 = 다소 보수적, 3 = 중도적 4 = 다소 진보적, 5 = 매우 진보적

제 4 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 사회통합실태조사

본 연구는 정부・정치신뢰, 투표참여 등이 포함된 한국행정연구원(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KIPA)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내 만 19~69세 전국민이다. 해당 조사는 총 400개 지역구(동・읍・면), 각 지역구별 10가구 등 총 4,000가구 추출을 목표로 각 시・도별 1차 층화, 동지역(도시화지역) / 읍・면지역(농・어촌) 지역으로 2차 층화, 동지역 대상 아파트 조사구 /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3차 층화를 시행하였다. 표본추출 시에는 지역구 대상 확률비례계통추출, 지역구 내 가구 대상 계통추출 후 조사 대상 가구 內 내 19~69세 가구원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그 후 모집단과 일치하도록 연령, 성별 등 구성비를 보정하여 8,000명을 표본규모로 확정하였다. 조사는 해당년도 9.1.~10.31.에 진행되었으므로, 연구 대상 기간은 2018년 9월 ~ 2019년 10월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정치・민주주의・경제상황 등 주관적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거버넌스・공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보장 등 사회 전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종속・독립변수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며, 조사대상 개인별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사하여 통제변수 확보가 가능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원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 신뢰도 및 연구의 외적 타당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2. 분석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미치는 정부신뢰, 정치신뢰 등 독립변수가 시민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주 효과(main effect)와 내적 정치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회귀분석 이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며,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3개 이상의 세부 질문 문항이 적용된 비투표참여, 정부신뢰의 경우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크론바하의 알파 값을 측정하고, 비투표참여 행태를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변수의 투입 단계마다 각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모형 Ⅰ]

$$(\text{정치참여}) = \alpha + \beta_1 \cdot \text{정부신뢰} + \beta_2 \cdot \text{정치신뢰} + r_1 \cdot \text{연령} + r_2 \cdot \text{성별} + r_3 \cdot \text{학력} + r_4 \cdot \text{소득} + r_5 \cdot \text{주관적계층의식} + r_6 \cdot \text{이념성향} + r_7 \cdot \text{정당일체감} + e$$

[모형 Ⅱ]

$$(\text{정치참여}) = \alpha + \beta_1 \cdot \text{정부신뢰} + \beta_2 \cdot \text{정치신뢰} + \beta_3 \cdot \text{내적정치효능감} + r_n \cdot \text{통제변수} + e$$

[모형 Ⅲ]

$$(\text{정치참여}) = \alpha + \beta_1 \cdot \text{정부신뢰} + \beta_2 \cdot \text{정치신뢰} + \beta_3 \cdot \text{내적정치효능감}$$

(모형 Ⅰ)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및 정치신뢰 값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여부 및 그 방향성을 파악한다.

(모형 Ⅱ)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을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며 회귀계수를 확인한다.

(모형 Ⅲ)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계산하여 모형에 투입하고, 설명력의 변화, 조절효과의 존재와 방향을 측정한다.

이 때,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과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정치신뢰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상호작용항 분석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에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처리한 값을 사용한다. 평균중심화 처리 관련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상호작용항}) = (\text{독립변수} - Mean_{\text{독립}}) \times (\text{조절변수} - Mean_{\text{조절}})$$

조절효과의 존재에 대한 가설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가 유의하여야 하며, 모형의 각 단계별 결정계수(R^2)가 유의하게 증가해야 하고, 모형 Ⅲ에서 상호작용항 회귀계수(β_4, β_5)의 유의성이 만족할 때 채택된다.

조절효과의 양태는 회귀계수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독립변수의 효과를 억제하는 완화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양자 간 부호가 같다면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증가시키는 강화효과를 보인다.

조절효과가 유의할 경우,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관련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정된 계수로 회귀식을 세운 다음, 조절변인의 값을 달리하여 식에 대입한 뒤 각각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연구자료의 경우, 2018~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표본크기(sample size) 확대를 통해 통계적 정확도를 제고하고, 2019년 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불매운동 등 비관습적 정치참여의 확대의 영향 및 당시의 정치적 지형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부분 통제하기 위하여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2017년 이전 조사는 조사항목이 상이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즉, 분석 대상 표본수는 2년치 응답자인 16,000명이며, 결측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데이터센터(data.go.kr)에 2019, 2020년 업로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하에 자유이용 가능)으로 개방한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 데이터 현황' 중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원자료(SPSS sav 파일)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고, 설문결과 원자료는 분석 필요에 맞추어 코딩 변경하여 활용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SPSS에서 제공하는 선형회귀 분석 절차를 활용한다.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 통제변수

본 연구대상자 16,000명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중,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45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400~500만원(19.2%), 300~400만원(19.0%), 500~600만원(15.7%), 200~300만원(13.8%) 순서대로 많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35.3%), 4년제 대학 졸(32.9%), 4년제 미만 대학 졸(20.1%) 순서로 많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 평균 4.96점(11점 Likert 척도(0~10))로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띄었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986	49.9
	여	8,014	50.1
연령	19~29세	2,898	18.1
	30대	2,935	18.3
	40대	3,520	22.0
	50대	3,841	24.0
	60대	2,806	17.5
학력	중등 이하	1,573	9.8
	고교	5,650	35.3
	4년제 미만 대학	3,209	20.1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월평균 가구 소득	소득 없음	94	0.6
	100만원 미만	588	3.7
	100~200만원	1,208	7.6
	200~300만원	2,204	13.8
	300~400만원	3,309	19.0
	400~500만원	3,073	19.2
	500~600만원	2,511	15.7
	600~700만원	1,491	9.3
	700~800만원	770	4.8
	800~900만원	442	2.8
	900~1,000만원	216	1.4
	1,000만원 이상	364	2.3

연구대상자의 이념성향의 경우, 중도(47.4%), 진보(29.5%). 보수(23.1%)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을 나타내는 지지 정당 여부의 경우 35.3%의 응답자가 '있다', 64.7%가 '없다'고 답했다. 일반적 여론조사에 비해 지지 정당 보유 비율이 낮은데, 이는 사회통합여론조사가 면접 조사 방식을 취함에 따라 일부 응답자가 지지 정당 보유 성향을 숨겼거나, 이념적 지지 강도가 약한 응답자가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 4-2] 연구대상자의 정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지지 정당	있다	5,648	35.3
	없다	10,352	64.7
이념	매우 보수적	505	3.2
	약간 보수적	3,186	19.9
	중도적	7,588	47.4

2. 종속변수 : 정치참여

투표참여의 경우, 투표율이 2016년 총선(79.8%), 2017년 대선(89.6%), 2018년 지방선거(83.7%) 모두 실제 투표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추출 자체는 대한민국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고르게 진행되었으나 면접원의 가구 방문 및 설문 참여에 승낙한 응답자들이 일반 시민보다 전반적인 사회참여 의지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3] 연구대상자의 투표참여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2016년 총선	참여했다	13,394	83.7
	참여하지 않았다	2,606	16.3
2017년 대선	참여했다	14,331	89.6
	참여하지 않았다	1,669	10.4
2018년 지방선거	참여했다	12,772	79.8
	참여하지 않았다	3,228	20.2
선거 참여 횟수	0회	1,143	7.1
	1회	1,146	7.2
	2회	1,782	11.1
	3회	11,929	74.6

비투표참여의 경우,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정치참여 방식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참여율 67.4%), 불매운동 참여(24.5%), 서명운동 참여(13.4%),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온라인상 의견 피력(11.0%), 시위·집회 참여(6.6%),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6.0%). 민원 전달(5.9%), 탄원·진정·청원서 제출(5.2%) 순으로 나타났다. 불매운동의 경우, 2019년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5.9%) 2019년 참여율이(43.5%) 크게 높아졌으며, 그 외에도 정치적 대화 外 모든 비투표참여 방식에서 전년 대비 참여율이 높아졌다.

모든 비투표참여 방식에 참여한 바 있는 응답자는 233명(1.5%), 어떤 방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313명(8.2%)로 나타났으며, 8가지 비투표참여에 대한 설문 응답치의 평균값은 1.90점이었다.

[표 4-4] 연구대상자의 비투표참여

구 분	활동한 적도, 해볼 의향도 없다 (1)	활동한 적은 없지만, 해볼 의향 있다 (2)	1년보다 오래 전에는 해본 적 있다 (3)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4)	평균 (S.D.)
정치·사회 현안 대화	2,235 (14.0%)	1,534 (9.6%)	1,454 (9.1%)	10,777 (67.4%)	3.30 (1.11)
온라인상 의견 피력	10,550 (65.9%)	2,545 (15.9%)	1,140 (7.1%)	1,765 (11.0%)	1.63 (1.02)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10,783 (67.4%)	3365 (21.0%)	898 (5.6%)	954 (6.0%)	1.50 (0.85)
서명운동 참여	8,131 (50.8%)	3,323 (20.1%)	2,503 (15.6%)	2,143 (13.4%)	1.92 (1.10)
탄원·진정· 청원서 제출	10,771 (67.3%)	3,518 (22.0%)	885 (5.5%)	828 (5.2%)	1.49 (0.82)
시위·집회 참여	9,725 (60.8%)	3,585 (22.4%)	1,637 (10.2%)	1,053 (6.6%)	1.63 (0.91)
민원 전달	10,153 (63.5%)	3,857 (24.1%)	1,044 (6.5%)	948 (5.9%)	1.55 (0.86)
불매운동	6,782 (42.4%)	3,750 (23.4%)	1,551 (9.7%)	3,917 (24.5%)	2.16 (1.21)
전체 평균	1.90 (0.67)				

3. 독립변수 : 정부・정치신뢰

정부신뢰의 경우, 4점 Likert 척도(1~4) 기준 중앙부처의 신뢰도는 2.33점, 지방자치단체는 2.41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대해 불신한다(전혀 믿지

않는다(1) + 별로 믿지 않는다(2))고 답한 비중은 중앙부처 58%, 지방자치단체 52%로 나타나 비교적 정부신뢰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회(1.86점), 법원(2.18점), 검찰(2.14점) 등 다른 공적 영역 및 정치권에 비해서 행정부 영역에 대한 신뢰는 높은 편이었다.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경우, 평균 2.74점을 기록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4-5] 연구대상자의 정부신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평균 (S.D.)
중앙부처 신뢰도	1,734 (10.8%)	7,538 (47.1%)	6,370 (39.8%)	358 (2.2%)	2.3 (0.70)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1,608 (10.1%)	6,709 (41.9%)	7,124 (39.8%)	559 (2.2%)	2.41 (0.72)
행정기관 공정성	426 (2.7%)	4,397 (27.5%)	10,135 (63.3%)	1,042 (6.5%)	2.74 (0.61)
전체 평균	2.50 (0.53)				

정치신뢰의 경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외적 효능감과 관련된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의 경우 부정적 답변인 ‘매우 동의한다’를 1점으로 한 5점 Likert 척도(1~5)에서 평균 2.80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동의한다’가 36.4%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같은 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도 평균 2.78점을 기록하여 두 문항으로 평가한 정치신뢰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두 문항 답변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6] 연구대상자의 정치신뢰

구분	매우 부정 (1)	2	3	4	매우 긍정 (5)	평균 (S.D.)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효능감	958 (6.0%)	5,822 (36.4%)	5,375 (33.6%)	3,118 (19.5%)	727 (4.5%)	2.80 (0.97)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반응성 여부	1,287 (8.0%)	5,144 (32.2%)	6,054 (37.8%)	2,826 (17.7%)	689 (4.3%)	2.78 (0.97)
전체 평균	2.79 (0.88)					

4. 조절변수 : 내적 정치효능감

내적 정치효능감의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정치현안 관련 인지 정도’ 및 ‘국민 대부분과 비교한 우리나라 정치현안 관련 상대적 인지 정도’를 5점 Likert 척도(1~5)로 설문하여 개인의 정치적 자신감에 근거한 내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2.92점을 기록하여 정치신뢰와 마찬가지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낮은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 기인하여 낮은 정치효능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고되고 있는 투표율에 대하여 정치효능감의 향상에 따른 효과로 보는 의견이 있고, 청년층의 높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간 상승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4-7] 연구대상자의 내적 정치효능감

구분	매우 부정 (1)	2	3	4	매우 긍정 (5)	평균 (S.D.)
나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56 (2.9%)	3,321 (20.8%)	7,362 (46.0%)	4,327 (27.0%)	534 (3.3%)	3.07 (0.85)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532 (3.3%)	5,187 (32.4%)	7,940 (49.6%)	2,038 (12.7%)	303 (1.9%)	2.77 (0.78)

제 2 절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설문에서 측정하는 다양한 비투표참여 행태를 유형화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상호관련된 변수(문항)들을 제한된 수의 차원이나 공통요인으로 분류하는 통계분석기법으로, 변수의 구조를 정의하고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기 위한 것이다. [표 4-8]에서 볼 수 있듯 비투표참여 8개 문항에 대해 VARIMAX 요인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와 그 외의 7개 정치참여 방식이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를 제외한 비제도적·비관습적 정치참여는 단일한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터넷·SNS 등 소통 수단이 다변화됨에 따라 항의활동(시위, 집회), 청원활동 등 과거의 정치참여 분류들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으로 융합되고 있고, 분류 기준은 모호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 대화는 온라인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며 그 목적 역시 직접적으로 정치권을 향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요인과 구별되었다. 해당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비투표참여의 유형을 '정치적 대화'와 그 외 7가지 비투표참여 형태를 묶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로 분류하고, 정치적 대화는 해당 측정값을,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해당되는 7가지 유형의 평균값을 통계분석에 반영한다.

[표 4-8] 비투표참여 요인 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 1 "비제도적" 정치참여	Factor 2 "정치적 대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0.131	**0.934**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0.752**	-0.00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0.850**	-0.128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0.746**	0.104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0.840**	-0.163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0.799**	-0.044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0.830**	-0.111
불매운동 참여하기	**0.564**	0.310

또한, 정치신뢰와 정부신뢰가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인지 관련하여 두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신뢰는 3가지 문항이 모두 단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정치신뢰는 본래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측정되던 문항 2개가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즉 정치신뢰와 정부신뢰는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4-9] 정부신뢰·정치신뢰 요인 분석 결과

설문 문항	Factor 1 (정부신뢰)	Factor 2 (정치신뢰)
중앙부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	**0.760**	-0.283
지방자치단체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	**0.702**	-0.394
행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0.636**	-0.326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0.426	**0.802**

연구 변수 중 범주형 척도를 활용한 3개 이상의 세부 질문 문항이 적용된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정부신뢰에 대하여 분석에 앞서 신뢰도를 확인한다. 측정의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크론바하의 알파(Cronhach' s Alpha)값으로, 값이 0.6을 넘는 경우 측정 문항 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SPSS를 활용하여 위 2가지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각 변수에 대한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0.6 이상으로 각 설문은 변수에 대해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세부 지표	Cronbach´s a
비제도적 정치참여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0.87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불매운동 참여하기	
정부신뢰	중앙부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	0.670
	지방자치단체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	

제 3 절 상관분석

정부신뢰, 정치신뢰, 내적 정치효능감 및 사회경제적 조건 등 통제변수들이 투표·비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이 서로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그 크기와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투표참여는 응답자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3가지 선거의 총 참여횟수(0회 ~ 3회)를 기준으로 하였고, 비투표참여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정치적 대화'와 '비제도적 정치참여' 2가지로 나눈 후,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우 해당하는 7가지 참여 방식에 대한 측정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신뢰, 정치신뢰, 내적 정치효능감의 경우에도 각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1] 상관분석 결과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속변수	1	투표참여	1											
	2	비투표참여 - 정치적 대화	.074***	1										
	3	비투표참여 - 비제도적 참여	-.005	.115***	1									
독립변수	4	정부신뢰	.035***	.030***	-.028**	1								
	5	정치신뢰	.014	.079***	.136***	.062***	1							
조절변수	6	내적 정치효능감	.082***	.018*	.177***	-.015	.173***	1						
통제변수	7	성별 (여성)	.001	-.041***	-.027**	.026**	-.020*	-.130***	1					
	8	연령	.321***	.040***	-.151***	.025**	-.072***	-.014	-.022**	1				
	9	학력	-.094***	.007	.176***	.015	.114***	.138***	-.139***	-.527***	1			
	10	가구 소득	.015	.004	.111***	-.002	.068***	.107***	-.004	-.130***	.325***	1		
	11	지지 정당 보유	.200***	.084***	.146***	.060***	.069***	.132***	-.053***	.144***	-.005	.043***	1	
	12	이념 성향 (진보)	-.054***	.030***	.123***	.063***	.083***	.040***	-.008	-.255***	.210***	.067***	.033***	1
	13	주관적 계층의식	.096***	.003	.002	.110***	.078***	.064***	.012	.064***	.094***	.203***	.041***	.068***

※ 음영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의미함 / * p<0.05, ** p<0.01, *** p<0.001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정부신뢰는 투표참여와 정치적 대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비제도적 참여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신뢰는 투표참여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비투표참여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은 모든 정치참여 형태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표참여는 연령, 주관적 계층의식, 지지정당 보유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별과 가구소득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비투표참여 중 정치적 대화의 경우,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 정당을 보유할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는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의 경우, 정부신뢰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은 반면, 정치신뢰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정치신뢰와 내적 정치효능감이 신뢰감의 대상은 다르지만, ‘정치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관련성이 높은 개념으로 분류되는 기존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다.

제 4 절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및 정치신뢰와 조절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정치참여(투표참여・정치적 대화・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내적 효능감과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투표참여 관련 참고적으로 개별 선거 참여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병행했다.

[표 4-12] 회귀분석 결과 Ⅰ - 선거참여 횟수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변 수			B	S.E.	β	p-v	B	S.E.	β	p-v	B	S.E.	β	p-v
독립변수	1	정부신뢰	.016	.013	.009	.210	.019	.013	.011	.132	.020	.013	.011	.125
	2	정치신뢰	.014	.008	.014	.060	.006	.008	.006	.443	.006	.008	.006	.426
조절변수	3	내적 정치효능감	-	-	-	-	.098***	.014	.055	.000	.147***	.016	.083	.000
상호작용	4	정부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09	.009	-.023	.331
	5	정치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13	.007	-.054	.073
통제변수	6	성별 (여성)	.020	.014	.011	.140	.030*	.014	.017	.025	.031*	.014	.018	.024
	7	연령	.226***	.006	.339	.000	.224***	.006	.336	.000	.224***	.006	.336	.000
	8	학력	.063***	.008	.074	.000	.058***	.008	.067	.000	.058***	.008	.066	.000
	9	가구 소득	.007	.003	.017	.034	.005	.003	.014	.084	.005	.003	.138	.089
	10	지지 정당 보유	.279***	.014	.147	.000	.268***	.014	.141	.000	.268***	.014	.004	.000
	11	이념 성향 (진보)	.006	.008	.005	.498	.005	.008	.005	.542	.005	.008	.004	.530
	12	주관적 계층의식	.030***	.004	.055	.000	.029***	.004	.054	.000	.029***	.004	.054	.000
상 수 항			.978***	.051	-	.000	.740***	.054	-	.000	.597***	.054	-	.000
R^2_{adj}			.137				.140				.140			
$\triangle R^2$			.137				.003				.000			
△F			281.543				51.828				0.332			
△F 유의확률			.000***				.000***				.088			

※ 음영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의미함 / * p<0.05, ** p<0.01, *** p<0.001

[표 4-13] 회귀분석 결과 Ⅱ -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한 경험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변 수			B	S.E.	β	p-v	B	S.E.	β	p-v	B	S.E.	β
독립변수	1	정부신뢰	.043*	.017	.020	.011	.042*	.017	.020	.012	.040*	.017	.019
	2	정치신뢰	.092***	.010	.073	.000	.094***	.010	.075	.000	.093***	.010	.074
조절변수	3	내적 정치효능감	-	-	-	-	-.024	.018	-.011	.183	-.023	.018	-.010
상호작용	4	정부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10	.032	-.003
	5	정치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58**	.017	.027
통제변수	6	성별 (여성)	-.077***	.018	-.035	.000	-.080***	.018	-.036	.000	-.081***	.018	-.036
	7	연령	.045***	.008	.005	.000	.045***	.008	.055	.000	.045***	.008	.055
	8	학력	.019	.010	.019	.062	.021*	.010	.020	.048	.021*	.010	.020
	9	가구 소득	-.001	.004	-.002	.782	-.001	.004	-.002	.838	.000	.004	-.001
	10	지지 정당 보유	.157***	.019	.068	.000	.160***	.019	.069	.000	.158***	.019	.068
	11	이념 성향 (진보)	.042***	.011	.032	.000	.042***	.011	.032	.000	.041***	.011	.031
	12	주관적 계층의식	-.009	.006	-.014	.093	-.009	.006	-.013	.100	-.009	.006	-.013
상 수 항			2.568***	0.80	-	.000	2.626***	.091	-	.000	2.632***	.091	-
R^2_{adj}			.017				.017				.018		
$\triangle R^2$			.017				.000				.001		
△F			30.242				1.770				5.880		
△F 유의확률			.000***				.183				.003***		

※ 음영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의미함 / * p<0.05, ** p<0.01, *** p<0.001

[표 4-14] 회귀분석 결과 Ⅲ - 비제도적 정치참여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변 수			B	S.E.	β	p-v	B	S.E.	β	p-v	B	S.E.	β	p-v
독립변수	1	정부신뢰	-.061***	.011	-.044	.000	-.055***	.011	-.039	.000	-.056***	.011	-.040	.000
	2	정치신뢰	.087***	.006	.104	.000	.071***	.006	.085	.000	.070***	.006	.084	.000
조절변수	3	내적 정치효능감	-	-	-	-	.185***	.011	.128	.000	.185***	.011	.129	.000
상호작용	4	정부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07	.020	-.003	.724
	5	정치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	-	-	-	-	-	-	.043***	.011	.030	.000
통제변수	6	성별 (여성)	-.001	.011	-.001	.942	.019	.011	.012	.091	.018	.011	.012	.105
	7	연령	-.050***	.005	-.092	.000	-.053***	.005	-.098	.000	-.054***	.005	-.099	.000
	8	학력	.060***	.007	.086	.000	.050***	.007	.072	.000	.050***	.007	.072	.000
	9	가구 소득	.018***	.003	.058	.000	.016***	.003	.051	.000	.016***	.003	.051	.000
	10	지지 정당 보유	.232***	.012	.151	.000	.211***	.012	.137	.000	.210***	.012	.136	.000
	11	이념 성향 (진보)	.060***	.007	.069	.000	.059***	.007	.068	.000	.059***	.007	.067	.000
	12	주관적 계층의식	-.012**	.004	-.026	.001	-.013**	.003	-.030	.001	-.013***	.003	-.030	.000
상 수 항			1.058***	.051	-	.000	.608***	.058	-	.000	.612***	.058	-	.000
R^2_{adj}			.081				.096				.097			
$\triangle R^2$			.081				.015				.001			
△F			156.971				267.773				7.981			
△F 유의확률			.000***				.000***				.000***			

※ 음영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의미함 / * p<0.05, ** p<0.01, *** p<0.001

[표 4-15] 로지스틱 회귀분석 - 선거별 투표참여 여부

구 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변 수		B	S.E.	exp(B)	p-v	B	S.E.	exp(B)	p-v	B	S.E.	exp(B)
독립변수	1 정부신뢰	.020	.041	1.330	.619	.212**	.056	1.193	.002	-.012	.043	.988
	2 정치신뢰	.002	.025	1.021	.935	-.022	.051	1.236	491	.055*	.026	1.056
조절변수	3 내적 정치효능감	.285***	.044	1.002	.000	.176**	.032	.978	.002	.301***	.046	1.351
통제변수	4 성별 (여성)	.021	.043	1.021	.635	.052	.055	1.053	.347	.059	.045	1.061
	5 연령	.683***	.020	1.980	.000	.690***	.026	1.994	.000	.475***	.021	1.609
	6 학력	.163***	.026	1.177	.000	.188***	.034	1.207	.000	.116***	.027	1.123
	7 가구 소득	.009	.010	1.009	.390	.027	.016	1.027	.035	.010	.011	1.010
	8 지지 정당 보유	.891***	.053	2.437	.000	.994***	.074	2.702	.000	.854***	.056	2.349
	9 이념 성향 (진보)	-.044	.029	.957	.129	.013	.037	1.013	.729	.032	.030	1.032
	10 주관적 계층의식	.082	.013	1.085	000	.044**	.017	1.045	.008	.104***	.014	1.110
상 수 항		-3.300***	.228	.037	.000	-2.862***	.288	.057	.000	-2.829***	.238	.059
-2 log likelihood		13750.959				9306.971				12916.638		
Nagelkerke R^2		.214				.171				.133		
모형 유의확률		.000***				.000***				.000***		

※ 음영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음을 의미함 / * p<0.05, ** p<0.01, *** p<0.001

1. 투표참여

[표 4-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인의 투표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인 정부신뢰, 정치신뢰와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및 내적 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 분석모형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내적 정치효능감의 유의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내적 정치효능감은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통제변수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정당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투표참여 횟수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이념성향은 투표참여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참여 횟수 외에 개별 선거인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은 투표 참여 횟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거에서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을 제외한 연령, 학력, 지지 정당 보유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는 선거에 따라 유의성이 달랐고, 일관성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016년 총선에서는 정부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17년 대선에서는 정부신뢰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신뢰가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표 4-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과 2019년 두 시점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조사자료(표본 : 8,000명) 및 2019년 조사자료(표본 : 8,000명)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다른 독립・조절・통제변수의 유의

성은 [표 4-12]과 동일했다. 다만, 정치신뢰의 경우 2018년에는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p-value 0.216), 2019년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0.028, p-value 0.010)

2. 비투표참여 Ⅰ : 정치적 대화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대화 경험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1단계,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만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이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독립변수의 경우, 정부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정치적 대화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정부신뢰와 내적 효능감 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는 0.058로 양수로 나타났다.

조절효과가 유의할 경우,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관련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된 계수로 회귀식을 세운 다음, 조절변인의 값을 달리하여 식에 대입한 뒤 각각의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통 대입할 조절변인의 값으로 $M-s.d.$, M, $M+s.d.$를 사용한다. (선영운, 2016).

이에 따라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이 정치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hat{Y}$: 정치적 대화, X_2: 정치신뢰, Z: 내적 효능감) 다만 내적 효능감은 단독으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아,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만을 대입하였다.

$$\hat{Y} = 2.632 + 0.093X_2 + 0.058(X_2Z) \qquad (1)$$

조절변수 값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수 Z값에 내적 정치효능감을 평균중심화한 값의 $M-s.d.$, M, $M+s.d.$값인 -0.78, 0, 0.78을 각 식에 대입하여 조절변수의 정도에 따른 회귀식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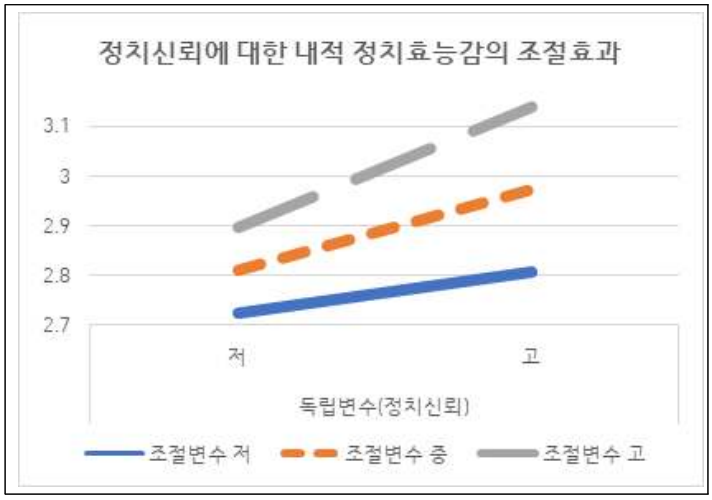
$$\hat{Y} = 2.632 + 0.048X_2 \qquad (1) - 1\ (Z=-0.78)$$

$$\hat{Y} = 2.632 + 0.093X_2 \qquad (1) - 2\ (Z=0)$$

$$\hat{Y} = 2.632 + 0.138X_2 \qquad (1) - 3\ (Z=0.78)$$

위의 세 가지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정치적 대화에 대한 조절효과 그래프



그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승한다. 즉, 내적 효능감이 정치신뢰가 정치적 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강화조절효과(positive moderating effect)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정당을 보유한 경우,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정치적 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치적 대화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조사자료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 2018년은 본 분석과 달리 통제변수 중 학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557) 2019년은 정부신뢰가 본 분석과는 반대로 정치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회귀계수 -0.062, p-value 0.013) 통제변수 중 이념적 성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242) 그 외 독립·조절·통제변수의 유의성은 [표 4-13]과 동일했다.

3. 비투표참여 Ⅱ : 비제도적 정치참여

[표 4-14]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한 1단계 분석모형으로부터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분석모형까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독립변수의 경우,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해 정부신뢰는 부정적, 정치신뢰는 긍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있어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정부신뢰와 내적 효능감 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 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는 0.043으로 양수로 나타났다.

해당 상호작용항의 의미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저·중·고집단을 나누어 조절효과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내적 정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hat{Y}$: 비제도적 정치참여, X_2: 정치신뢰, Z: 내적 효능감)

$$\hat{Y} = 0.612 + 0.070X_2 + 0.185Z + 0.043(X_2Z) \qquad (2)$$

이후 Z값으로 평균중심화된 내적 정치효능감의 $M-s.d.$, M, $M+s.d.$값인 -0.78, 0, 0.78을 각 식에 대입하여 조절변수의 정도에 따른 회귀식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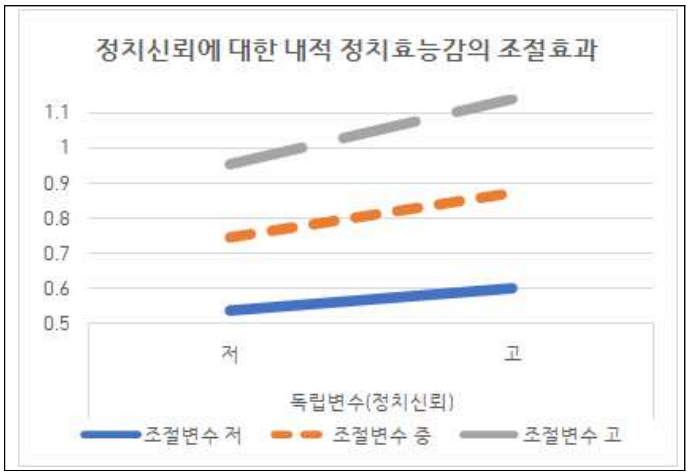
$$\hat{Y} = 0.468 + 0.036X_2 \qquad (2) - 1\ (Z=-0.78)$$

$$\hat{Y} = 0.612 + 0.070X_2 \qquad (2) - 2\ (Z=0)$$

$$\hat{Y} = 0.756 + 0.104X_2 \qquad (2) - 3\ (Z=-0.78)$$

위의 세 가지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조절효과 그래프



그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승한다. 즉, 내적 효능감이 정치신뢰가 정치적 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강화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지지정당을 보유한 경우,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조사자료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 그 결과 다른 독립・조절・통제변수의 유의성은 [표 4-14]과 동일했다. 다만, 정부신뢰의 경우 2018년에는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회귀계수 -0.104), 2019년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0.051, p-value 0.001)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에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유의해야 한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때는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을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VIF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최민호, 2018) 본 연구 회귀분석 중 3단계 분석을 기준으로 측정한 VIF 값은 1.021(정부신뢰 x 내적 정치효능감) ~ 1.612(학력)으로 모두 2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인 10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6] 연구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분석 결과	채택 여부
	번호	내용		
직접 효과	1-1	개인의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하지 않음	기각
	1-2	개인의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비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대화) 긍정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부정적**	**일부 채택**
	2-1	개인의 정치신뢰(외적 효능감)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하지 않음	기각
	2-2	개인의 정치신뢰(외적 효능감)가 높을수록 비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채택**
조절 효과	3-1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유의하지 않음	기각
	3-2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유의하지 않음	기각
	3-3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유의하지 않음	기각
	3-4	내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긍정적 영향 강화	**기각**

제 5 절 분석결과 종합

우선 투표참여의 경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치신뢰와 정부신뢰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신뢰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보인 바 있지만,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신뢰가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신뢰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투표의 효용이다. Riker and Ordeshook(1968)은 A.Downs의 저작 「민주주의의 경제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관한 손익계산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박찬욱, 1996)

$$R = PB - C + D$$

위 공식에서 R은 투표행위에 따른 손익이다. P는 투표결정에 임한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다. B는 투표행위를 통해 선거결과가 바뀌었을 때 얻는 효용, C는 투표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D는 투표행위 자체에서 얻는 편익으로, '장기적 참여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단위 선거에서 유권자 개인의 참여가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 확률(P)는 극히 작다. 그러므로 투표참여의 효용은 $-C+D$에 수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권자의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기초한 기대값(B)은 투표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의 투표참여는 편리한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비용(C)이 비교적 낮다. 그러므로 정치권에 대한 평가인 B값과 무관하게, 투표참여 비용이 낮아 유권자가 비교적 가볍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행위의 손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신뢰의 고저 여부

가 투표 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히려 유권자 자신의 투표 참여로 인한 흥미, 사회의 장래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등은 유권자 효용 중 D를 제고하여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내적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위와 같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투표참여 자체를 권리 행사 내지는 시민적 책무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투표참여의 유인을 높인 것이다. 다만 내적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정부·정치신뢰 간 조절효과의 경우 위계적 회귀모형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작용항의 영향력도 미미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정부신뢰와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가 객관적·합리적으로만 정부신뢰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정부신뢰의 실질적 대상을 '현직 정부 여당'으로 인식함에 따라, 현 정부의 이념 성향과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일치 여부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상응·길정아, 2020) 금현섭·백승주(2010)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7년에는 진보성향 시민의 정부신뢰가 보수성향 시민에 비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9~2010년에는 반대로 보수성향 시민의 정부신뢰가 진보성향 시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 성과평가만이 아니라,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른 호감도라는 주관적 성향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집단의 경우에도, 아래 표와 같이 현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진보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정부신뢰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7]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 (2018~2019년)

구 분	보수	진보	t값
평균(표준편차)	2.44 (0.54)	2.54 (0.53)	7.88***

이렇게 유권자 신뢰의 대상인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 주체임과 동시에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정부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권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권자는 행정부의 집권 기간의 성과 및 향후 기대를 투표 여부에 반영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 정부의 이념 성향을 선호하는지 여부도 함께 반영하게 된다. 또한, 유권자의 이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이 갖는 일종의 ‘매개 효과’때문에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권자별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특정한 유권자는 행정부의 성과를 낮게 평가함에도 ‘여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려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권자는 행정부 자체는 지지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라는 정서가 정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형성되고, 투표를 통해 환류를 일으킨다는 견해를 반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조사자료와 2019년 조사자료에서 정치신뢰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 개별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2017년 대선에서 정부신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신뢰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신뢰의 투표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조사 시기 및 당시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비투표참여의 경우, 요인 분석에 따라 분류된 정치적 대화와 그 외 비투표참여 방식인 비제도적 정치참여 간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우, 정부신뢰는 부정적 영향을 준 반면 정치신뢰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정부신뢰의 부정적 영향은 행정부와 관료에 대한 불신 및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에 대항하여 참여를 통해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Gamson 가설의 ‘적대적 참여’ 유형을 지지한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정부신뢰가 높은 계층은 ‘정부 비판’ 목적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정치신뢰는 모든 형태의 비투표참여와 정적 관계에 있었다. (회귀계수 : 0.039 ~ 0.134) 비투표참여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로 하더라도, 정치체제의 반응성이나 정책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면 국민은 정치적 무관심에 빠질 뿐 투표참여의 대체재로서 비투표참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정부신뢰와 정치신뢰가 모두 낮다면 정치참여를 포기하겠지만, 정치신뢰가 높다면 정치참여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대신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를 통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투표참여는 정치신뢰를 전제하는 행위이며, 본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한국의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정치체제가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리라 기대하기보다는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발생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부 이론 및 선행연구가 낮은 정치신뢰를 비투표참여의 원인,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참여의 동기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박원호, 2017, 이재현・김욱, 2018) 이에 대하여 낮은 정치적 신뢰와 높은 정치적 불만이 정치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들을 처벌하려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재반론이 가능하다. (유성진, 2017)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시민의 낮은 정치신뢰는 체제 자체보다 특정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유권자들의 처벌욕구를 유발하고 정치참여를 촉진시켜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실망’은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 시민은 두 개념은 혼재되어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연구가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며, 한 가지 시각을 배척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정부가 개인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신념을 뜻하는 '정치적 냉소주의'(political cynicism) 내지는 무의식적 애착에 근거한 심리적 포기를 뜻하는 '정치적 냉담'(political apathy)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 반면, 정치신뢰는 정치체제에 대해 애착이 없이 관심·흥미를 상실한 상태인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신뢰의 하락은 정치적 냉담으로 이어져 다른 애착의 대상을 찾는, 즉 대안적 정책 추진을 위한 비제도적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반면, 정치신뢰의 하락은 애착의 상실, 즉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져 정치참여에서 이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대화의 경우, 정부신뢰와 정치신뢰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신뢰의 경우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높아지면 정치정보·지식을 습득하고 정치적 관심도를 높여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독립·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대화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상적 오프라인 정치 대화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향한 지지 정도인 정치적 확신이 높을수록 제고되는 경향이 있다. (김기동, 남태우. 2018) 이 점에서 착안한다면 높은 정부신뢰를 가진 시민은 정치적 확신을 기반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정치적 대화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친정부 성향의 시민도 적극적인 지지 표현의 일환으로 비투표참여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을 일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비투표참여 전반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호오를 배제하였을 때 진보 진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정부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2018년 조사자료와 2019년 조사자료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선거 유무, 일본의 무역 보복 등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시기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데이터에 근거한 추세 분석을 통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내적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보면, 투표참여에는 조절효과가 없었던 것과 달리 비투표참여에는 일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신뢰에는 유의성이 없는 반면 정치신뢰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켰다. 정치신뢰에서 나타난 조절효과는 정치체제의 반응성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에 대한 높은 평가와 결합하여 비투표참여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가설 설정의 근거인 높은 내적효능감이 낮은 정치신뢰 보유자의 소극적 정치참여를 보완하는 효과는 미미했음을 뜻한다. 반면, 내적 효능감은 높은 정치신뢰 보유자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대 및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적 무관심층에게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정치 고관여층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의 가치를 고평가하게 함으로써 정치참여를 자극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정부신뢰에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 정부신뢰는 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관련되고, 비투표참여, 특히 정치적 대화를 제외한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낮은 정부신뢰에서 파생되는 적극적 저항 활동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비투표참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낮은 정부신뢰를 지닌 계층이 높은 내적 효능감에 힘입어 정부에 대항하는 참여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높은 정부신뢰를 지닌 계층은 내적 효능감이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정치참여에 나설 유인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듯 정부신뢰가 비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절대적이므로, 양자간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 효능감의 직접적 영향력을 보면, 정치적 대화와는 달리 비제도적 정치참여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투표참여와 달리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시간, 비용 등 대가가 수반되므로 정치적 자산으로서 고효능감을 지닌 계층이 참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지식 및 능력을 지닌 계층은 투표는 물론 정치권에 직접적·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투표참여에서 자신의 한 표가 승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정치적 대화가 주변 이웃을 설득하는 영향력은 간접적이다. 이와 달리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정치체제에 직접적이고 체감되는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고, 해당 의사결정자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시도된다. 즉, 내적 효능감이 높은 적극적 계층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근거로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정부신뢰와 높은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동원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라는 Gamson 가설을 지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시민은 정부신뢰의 대상인 ‘정부’를 인식함에 있어 관료집단이나. 정부의 객관적 성과 뿐 아니라 ‘현직 정부 여당’을 그 대상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시민의 이념 성향이 정부신뢰 형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신뢰는 각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제고되어 정치적 동원에 관한 Gamson 가설을 지지하였다.

2. 정치신뢰는 투표참여의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투표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투표참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치적 요구에 반응하고, 그것을 의제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므로 정치신뢰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 그리고 내적 효능감은 정치신뢰의 비투표참여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3. 내적 효능감은 정치참여 자체의 책무성과 그 효용을 높여 정치참여의 비용을 상쇄시키며,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투표참여와 정치적 동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1) 단, 전술하였듯 시민의 정치적 감정은 복합적으로 형성된다는 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와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가 혼재된다는 점에서 실제 정치신뢰의 영향력은 정치적 상황,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포함한 관련 연구 결과도 그 방향성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온라인 정책건의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는 등 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참여는 정파적 이해나 특정 이익집단과 관련된 이슈에만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념을 불문하고 중위 투표자를 겨냥한 포괄정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당 및 시민단체의 계층·조직적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 대신 현상유지적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과 극단적 정치 의견이 대두되는 비제도적 정치 담론 간 간극이 커진다면, 각 계층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될 공간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의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 저하와 정치신뢰 및 정치참여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계층별 불균등한 정치참여의 문제가 존재한다. 정치참여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정책의제설정과 그 집행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의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결과는 정치신뢰의 증대가 특히 비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다. 즉, 정치권의 반응성 및 시민의 의견을 정책추진에 반영하는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류태건, 2016) 이러한 추세를 반전하여 정치신뢰 개선 및 정치참여 독려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제·산업, 노동, 환경 등 정책분야별로 국민 및 집단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제 및 입법화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구체화되는 정책수요와 이에 근거한 정책적 대안을 수용하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더욱 자주 개방할 때 정치체제의 반응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 및 공동체에 대한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나의 정치참여가 정치체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신뢰인 내적 효능감은 외부에 대한 정서보다도 정치참여의 증대에 가장 연관성이 깊은 변수로 나타났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적 지식, 정보, 영향력 등 주관적인 정치적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시민 자신의 객관적·주관적 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율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치적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노동조합, 이슈네트워크 등 조직적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적 효능감은 곧 정치참여 자체를 통해 스스로 얻는 효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참여 자체가 시민 개인의 정치적 학습의 기회이자 시민적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계기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 대상 정치참여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유권자를 육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결정에는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민주성과 한정된 예산 하에서 최대의 효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효율성이라는

두 행정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거나, 포퓰리즘적인 정치참여의 확대가 아닌 '정치참여의 건전한 극대화'가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인 정부신뢰와 이에 근거한 정치참여가 객관적 평가가 아닌 시민 각자의 당파성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향은 정치참여의 건전한 극대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이념 성향이 뚜렷한 유권자는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비확증 편향(disconfirmation bias)이 강하다. (Lodge and Taber, 2013: 하상응・길정아, 2020에서 재인용) 이러한 편향은 다른 성향의 유권자들 간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 이념 양극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포퓰리즘적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이고 개념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문제이다. 다만,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본다면 정부, 정치권 및 언론이 정파적 유불리와 별도로 타당한 정책대안 마련 및 사실에 근거한 정책 성과평가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이 객관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행정부 각 부처가 현행 일방적 정책홍보에서 탈피하여 이해당사자 및 시민과 정책성과 및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실패 사례를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전술한 정치참여 중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정치 관심의 증진과 정치 참여의 독려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가치와 바람직한 유권자의 태도・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파적 이익 뿐 아니라 정책적 가치와 그 성과로 평가받는 행정문화를 조성해나간다면 정부신뢰와 정치참여의 양적・질적 성장도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는 정치참여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권자의 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이론적·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정부·정치신뢰와 조절변수인 내적 효능감이 독립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변수는 개념적으로는 신뢰의 대상과 형성 방식에 따라 구별되나,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정치신뢰와 정부신뢰,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시민이 정치적 정서를 체계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현 정권과 이념에 대한 호불호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더 나아가, '여당'과 '정치권 전반'을 구별하지 않아 정부신뢰와 정치신뢰가 혼재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투표한 여당의 정치적 성과가 좋다면, 정부, 정치권, 그리고 투표한 자신까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정'과 관련한 개념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와 관련된 변수를 구분하여 양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 등 질적 접근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별, 계층별 대표 패널에 대한 정기적이고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따른 신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론을 개별 변수 차원을 넘어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의 인과관계 및 인과관계의 과대·과소평가 가능성이다. 정치적 선택이 일회성 의사결정(one-shot game)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감정 및 신뢰도에 근거하여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일방향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은 유권자의 일생동안, 투표주기마다 진행되는 반복게임(repeated game)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참여(또는 미참여)에 따른 결과와 그 경험이 행위자의 정부·정치신뢰에 환류로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결과는 내적 효능감과 정치신뢰 모두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선행변수이자, 정치참여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이강형, 2013) 예를 들어 시민이 낮은 정부신뢰에 근거하여 시위 등 항의참여에 나섰을 때, 정부가 해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호의적으로 반응한다면 항의참여는 오히려 정부신뢰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신뢰 및 평가와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종속변수로 엄밀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분쟁, COVID-19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 외부 요인이 정부·정치신뢰와 정치참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허위·혼란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16,000명의 표본을 활용했으나,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왜곡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상존한다. 2018·2019년 조사결과를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일부 변수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전술하였듯 정치참여 동기와 관련, 패널 데이터에 근거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두드러졌던 온라인 정치참여, 친정부·반정부적 항의참여 등에 참여한 시민의 정부·정치신뢰 변화 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과관계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은 질문 문항 수에 따른 측정의 신뢰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문항이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신뢰는 3개, 정치신뢰와 내적 정치효능감은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분석은 평균값으로 반영하였다. 내적 일관성의 평가기준인 크론바하의 알파값을 구하기 위한 최소 측정항목수가 3개임을 감안한다면,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은 측정의 신뢰성 평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또한, 정치신뢰는 두 문항간 상관계수가 0.650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내적 정치효능감의 경우 관련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두 문항임에도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서 잘 알고 있다' (3.07)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2.77) 측정값의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2)]

다만, 대다수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1~2개의 문항으로 해당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국내 다수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하여 매년 시행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도 이와 유사한 1~2개의 문항[3)]으로 정치신뢰와 내적 효능감을 측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 감정 변수 관련 연구 관련 측정 신뢰도의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신뢰 및 효능감에 대한 신규 측정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단위 조사에 적용함으로써 정치학 및 정책학의 주요 개념인 신뢰, 정치효능감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2) 본 연구에 활용된 다른 설문문항과 달리, 내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전자는 긍정적, 후자는 부정적 문항으로 문항진술방식이 상이하다. 문항의 길이, 긍/부정 여부, 순서 등은 응답결과에 차이를 불러일으키며(한혁, 2019), 특히 백순근, 김미림(2010)에 따르면 동일한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긍정적 문항이 부정적 문항보다 높은 측정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사도 이러한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 (2016년 KGSS 설문 #97)
- (내적 효능감)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 (외적 효능감)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없다. /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참 고 문 헌

한국행정연구원, (2018).「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KSIS)」

한국행정연구원, (2020).「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KSIS)」

강수영. (2013).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294-323.

강우진. (2015).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23

강원택, 박원호, 김석호. (2019).「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나남

곽현근. (2007).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한국행정학보, 41(4), 229-259.

금현섭,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길정아. (2019).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3), 31-69.

길정아. (2019). 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참여 :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의정연구, 57, 103-139

김기동, 남태우. (2018). 일상적 정치 대화의 결정요인 :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화의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34(1), 229-256

김기동, 이재묵, 이지영. (2019).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투표참여를 대체하는가, 보완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18(1), 29-64.

김기동, 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김민혜, 이승종. (2016). 시민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4). 91-123.

김병규, 이곤수. (2013).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541-566

김병섭, 강혜진. (2015). 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115-137

김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2), 27-59.

김원철, 서영지, 황금비. (2020) 성공적 방역에 '국가 효능감' 확인… 사실상 문 대통령의 승리,「한겨레」. 2020.04.16.

김한나. (2016). 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심리적 조건: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1), 81-110

남궁근. (2017).「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류태건. (2010).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14(2), 243-267.

류태건.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3), 383-416.

류태건. (2016).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6(1), 1-28

문영세. (2019). 정부신뢰 측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5(1), 121-150.

박경효. (2013).「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박영득 (2016). 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현대정치연구, 9(2), 5-29

박원호. (2014). 세대갈등 : 청년의 정치적 소외를 중심으로, 고상두・민희 편「후기산업사회와 한국정치」. 서울: 마인드맵

박원호. (2017).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한국의 사회동향 2017, 298-304

박재영. (2016), 세대와 정치참여 :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찬욱. (1996). 선거정치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 다운즈(A.Downs)의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8(1), 1-29

박찬욱. (2014).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박푸름 (2015). 정부신뢰 개념의 범위와 요인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30-441

박현주, 이명진. (2018). 한국과 독일의 정부신뢰 영향요인 비교. 공공사회연구, 8(1), 5-37.

배귀희, 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9.

백순근, 김미림. (2010). Likert형 태도 척도의 문항진술방식에 따른 척도 및 문항 특성 비교. 교육평가연구, 23(4): 869-886

백창재. (2012). 샷슈나이더의 정치이론에 대한 소고 : 현대 미국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7, 139-161.

백창재, 정하용. (2016). 정당과 유권자 : 샷슈나이더 이론의 재조명, 한국정치연구, 25(3), 1-30

서정욱 (2018). 국민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부신뢰의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0(3), 531-552

서베이리서치센터 (2018). 2003~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누적 설문지

서현진. (2003).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7(1), 337-361.

선영운. (2016). 아동의 모애착, 또래관계기술,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애착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49-80

신상준, 이숙종.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0(2), 1-37

양건모. (2007).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73-194

오혁제. (2009). 중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성진. (2017)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한국과 국제정치, 99, 1-25

이강형. (2013).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정치 효능감과 정서적 반응의 역할 : 분노(anger)와 두려움(fear)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9(2), 137-167

이수영, 곽진영. (2002). 한국인의 정치 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35(4), 165-188.

이숙종,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이승원, 임한샘, 이현우. (2018).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OUGHTOPIA, 33(3), 111-141.

이승종, 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 박영사

이우진, 하솔잎. (2016).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18(3), 81-104.

이재현, 김욱. (2018) 비제도적 정치참여가 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8(1). 89-11

이재철. (2019). 정치참여의 유형 비교 : 수도권 시민의 관습적 정치참여와 비관습적 정치참여 분석. 현대정치연구, 12(3), 35-67.

이창원, 조문석 (2016).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2(4), 153-181

이학식, 임지운 (2017).「SPSS 24 매뉴얼」, 집현재

이혜인, 홍준형. (2016).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791-822

정한울, 이곤수. (2013).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1). 211-244

정희옥, 윤종빈, 김진주. (2014).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를 결정하는 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4(3), 415-430

조진만. (2017). 투표와 촛불집회 : 참여 요인 비교와 관계 분석, 의정논총, 12(2), 117-136

최민호. (2018)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성락, 전별. (2019).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 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238-248.

하상응, 길정아 (2020). 유권자의 정치 관심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 정부신뢰의 이념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2), 31-57.

한혁. (2019). 가구소득 측정방식의 특징 및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사연구, 20(2), 29-60

한혁, 금현섭. (2017). 만족도 측정 방법의 비교가능성 연구 :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4,5,11점 리커트형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8(1), 61-96

허석재. (2015).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한국정당학회보, 14(3), 41-67

홍혜승, 류은영. (2015),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131-155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Hetherington, Mark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Miller, Arthur. (1974). Rejoinder to Comment by Jack Citrin: Political Discontent or Ritu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89-1001

Schattschneider. E. E. (2008).「절반의 인민주권」(현재호, 박수형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1960)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Verba, Sidney, Nie, Norman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

NOH, Myeong-Jo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c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has been growing,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turnout and online participation (e.g. petition to the Blue House, political influencer in YouTube). So, it is time to comprehensively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for equal agenda setting across all classes and ideologies. In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and policy implications of government and political actors can be derived by clarifying the impact of trust,

the emotional tendency of citizen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and political trust, the sentiment of political system, on voting participation and other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non-voting). In addition, it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which means each citizen's political knowledge and confid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mming up and organizing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o far by dividing the political trust of citizens into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trust, an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rust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voting and non-voting according to the way they participate in politics.

Using the data of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in 2018~2019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KIPA), 16,000 adults aged 19 to 69 in Korea were selected as samples. SPSS 25 i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ey were conducted in the order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With regard to operational definitions, the votes in the 2016 general electio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18 local elections were reflected in the voting participation measurement. In the process of factor analysis, non-voting participation was distinguished as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public participation, protests and online participation) and political dialogue. Accordingly, participation in voting, political dialogue,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analyzed respectively. Control variables reflected

gender, age, income, education, ideological orientation, party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hierarchical awar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rust in government did not affect voting, and in the case of non-voting participation, political dialogue was positive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as negative. Political trust did not affect voting, but it had a positive impact on non-voting participati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positive impact on voting. About non-voting participation, it did not affect political dialogue but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was positive.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the inner efficacy reinforced the positive influence o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non-voting participation, and the rest were not significant. By typ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confirmed that voting was only positive fo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while the non-voting participation tend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dependence and moderating variables except in some c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interpreted as follows: In the case of government trust, voters tend to project not only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e incumbent ruling party in the "government". So, there is a leaving room for individual voters' ideological inclinations to intervene in formation of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voting is inconsistent, depending on individual ideological orientation. When the higher the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the lower the government trust,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nhanced. It supports the "Gamson's hypothesis" on political mobilization. Political trust enhances non-voting participation by raising expectations

for the political system. Internal political efficac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increasing the utility gained from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tself. To this end, civic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required. Also, political parties should work hard to collect opinions by each policy field, set policy agenda and make policies.

This study has few limitations of the fact that independent and moderating variables do not have statistically strict independence, that the possibility of inverse causality exists, and the reliability problem of measurement according to few questionnaires. Subsequent research needs qualitative researches on the proc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ew measurement questions about political trust an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Keywords :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Trus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Particip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25736